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

연구기관 : 국회미래연구원
책임연구진 : 국민선호미래연구팀
조사수행기관 : (주)마크로밀엠브레인

2019. 01. 25

목차

제1장. 조사 개요

I. 조사 설계	8
II. 주요 조사 항목	9
III. 응답자 특성	10

제2장. 조사 결과

I. 변화에 대한 인식	13
1. 우리 삶의 모습 변화	13
2. 과거 대비 우리 삶의 모습 변화	14
3. 미래 우리 삶의 모습 변화 예상	16
4. 30년 후, 분야별 변화 예상	18
※ 미래 정책 방향 선호도-요약	21
II. 미래 정책 방향 선호도	22
1. 이민 정책	22
2. 환경 정책	24
3. 외교안보 정책	26
4. 부동산 정책	28
5. 복지 정책	30
6. 지방 분권	32
7. 가족 제도	34
8. 빅데이터의 활용	36
9. 정치 갈등	38
10. 노동 정책	40
11.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	42
12. 인프라 정책	44

13. 기후와 에너지 정책	46
14. 인간 존엄과 생명 기술	48
15. 안락사	50
16. 식량자원 정책	52
17. 우주 개발	55
Ⅲ. 요약 및 결론	57
부록1. 설문지	63

제1장

조사개요

I 조사 설계

-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여,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산하 정책 연구기관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환경변수를 연구하고 있음.
 - : 빅데이터 분석 및 전문가 토론을 통해 미래결정 변수 분야를 체계화 하고, 13개 분야별로 2050년 시나리오를 연구함으로써 위험한 미래로 갈 가능성을 낮추고, 국민이 선호하는 미래로 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함
- 본 조사는 분야별로 발굴된 정책 과제에 대한 장단점, 부작용, 대안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 30년 후, "2050년의 미래" 정책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조사로, 만 15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의 전국 남녀를 본 조사의 대상으로 한정함. 조사의 효율성 및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의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웹서베이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조사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성/연령 등 전국 인구현황을 반영한 할당 표집을 실시함.

조사대상	만15세 이상~ 65세 이하 전국 남녀
표본설계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할당표집
조사방법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web survey
조사규모	총 3,000명 (가 타입 1,500명, 나 타입 1,500명)
조사내용	미래에 대한 인식, 분야별 정책에 대한 선호도 등
조사기간	2019년 1월 18일 ~ 1월 22일 (총 5일)
조사기관	(주)마크로밀엠브레인

II 주요 조사 항목

문	내용	"가"타입 (1,500명)	"나"타입 (1,500명)
SQ	응답자 선정 질문 : 연령, 거주지역, 성별	○	○
AQ1	과거 대비 현재 우리 삶의 모습 변화 :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	○
AQ2	미래 우리 삶의 모습 변화 예상 :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	○
AQ3	30년 후 분야별 미래 전망 : 기후, 에너지/자원, 식량/수자원, 국 제정치, 북한, 과학기술(정보통신, 생명, 우주), 경제, 거주환경, 인 구/사회, 정치/행정, 사람(human, 인간관계)	○	○
BQ1	기후와 에너지 정책 : 에너지 전환 정책	○	
BQ2	환경정책 :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
BQ3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 : 인공지능에 활용 제한 문제	○	
BQ4	빅데이터의 활용 : 빅데이터의 활용 제한 문제	○	
BQ5	인간 존엄과 생명기술 : 바이오 기술과 인간 존엄/가치 문제		○
BQ6	우주개발 : 우주기술 개발/투자 문제		○
BQ7	식량자원정책 : GMO 등 허용 문제	○	
BQ8	외교안보정책 : 동북아(한중미일) 관계	○	
BQ9	복지 및 노동정책 : 양극화 등을 고려한 복지정책		○
BQ10	복지 및 노동정책 : 인공지능과 노동 정책		○
BQ11	부동산정책 : 부동산 자산 불평등 문제(토지공개념)	○	
BQ12	인프라정책 : 인구감소와 인프라 투자		○
BQ13	가족제도 : 새로운 생활공동체 문제	○	
BQ14	이민정책 : 외국인 근로자 등 이민정책		○
BQ15	정치 갈등 : 새로운 사회/문화 갈등 방향	○	
BQ16	지방분권 : 지방자치강화		○
BQ17	안락사 : 안락사 허용 문제	○	
DQ	배경 질문: 직업, 소득, 학력, 결혼여부, 자녀여부, 정치성향	○	○

Ⅲ 응답자 특성

“가” 타입		사례수 (명)	비율 (%)
■ 전체 ■		(1500)	100.0
성별	남자	(764)	50.9
	여자	(736)	49.1
연령별	15~18세	(87)	5.8
	19~29세	(295)	19.7
	30대	(285)	19.0
	40대	(340)	22.7
	50대	(336)	22.4
	60~65세	(157)	10.5
지역별	서울	(294)	19.6
	경기/인천	(469)	31.3
	대전/세종/충청	(154)	10.3
	광주/전라	(144)	9.6
	대구/경북	(146)	9.7
	부산/울산/경남	(230)	15.3
	강원/제주	(63)	4.2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73)	11.5
	200~400만원 미만	(481)	32.1
	400~600만원 미만	(446)	29.7
	600~800만원 미만	(224)	14.9
	800만원 이상	(176)	11.7
직업	화이트칼라	(696)	46.4
	블루칼라	(206)	13.7
	자영업	(102)	6.8
	주부	(189)	12.6
	학생	(196)	13.1
	무직, 기타	(112)	7.5

Ⅲ 응답자 특성

“나” 타입		사례수 (명)	비율 (%)
■ 전체 ■		(1500)	100.0
성별	남자	(764)	50.9
	여자	(736)	49.1
연령별	15~18세	(87)	5.8
	19~29세	(295)	19.7
	30대	(285)	19.0
	40대	(340)	22.7
	50대	(336)	22.4
	60~65세	(157)	10.5
지역별	서울	(294)	19.6
	경기/인천	(469)	31.3
	대전/세종/충청	(154)	10.3
	광주/전라	(144)	9.6
	대구/경북	(146)	9.7
	부산/울산/경남	(230)	15.3
	강원/제주	(63)	4.2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68)	11.2
	200~400만원 미만	(504)	33.6
	400~600만원 미만	(450)	30.0
	600~800만원 미만	(208)	13.9
	800만원 이상	(171)	11.4
직업	화이트칼라	(679)	45.3
	블루칼라	(221)	14.7
	자영업	(99)	6.6
	주부	(177)	11.8
	학생	(194)	12.9
	무직, 기타	(130)	8.7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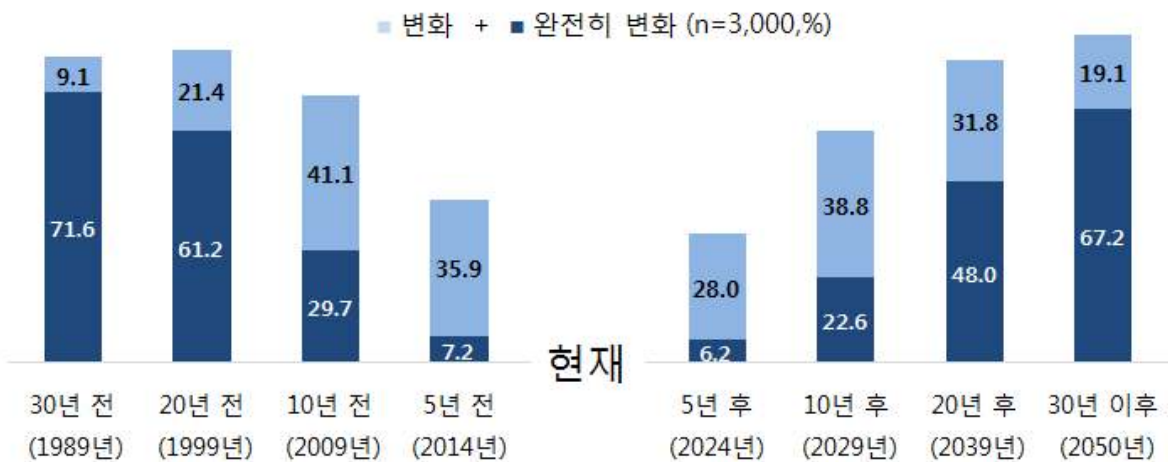
조사결과

I 변화에 대한 인식

1. 우리 삶의 모습 변화

- 현재의 삶의 모습을 기준으로 과거 대비 변화 및 미래 변화를 예상하게 한 결과, 기간에 따라 변화의 폭이 커질 것으로는 보고 있으나, 과거에 경험한 변화 보다는 미래에 발생할 변화의 크기/정도가 더 적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향이 나타남.
- 일반적으로 미래의 변화 속도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일반국민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변화 예측이 다소 어려운 상황임. (이미 경험한 과거에 대해서는 정보가 있어, 변화의 정도를 판단 할 수 있으나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는 막연한 예측을 해야 하기 때문)

과거 및 미래 변화 인식 (n=3,000,%)



※ '가' 타입(n=1,500)과 '나' 타입(n=1,500)의 조사 결과를 통합하여 결과를 산출함

< 기간별 '변화+완전히 변화' 응답 비율 >

기간	응답 비율 (%)	점수
30년전 (1989년)	80.7%	4.63점
20년전 (1999년)	82.6%	4.44점
10년전 (2009년)	70.7%	3.87점
5년전 (2014년)	43.1%	3.17점
현재	-	-
5년후 (2024년)	34.1%	2.94점
10년후 (2029년)	61.4%	3.66점
20년후 (2039년)	79.8%	4.19점
30년 이후 (2050년)	86.3%	4.4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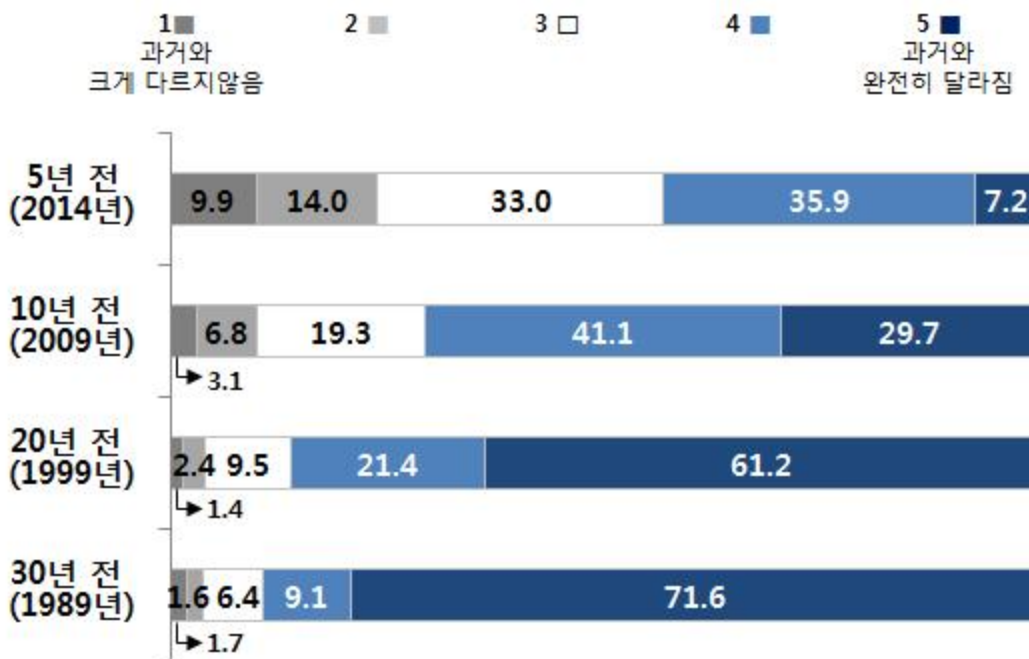
※ 점수가 높을수록, 변화가 크다고 인식

2. 과거 대비 우리 삶의 모습 변화

- 과거 대비 현재 우리 삶의 모습을 기간별로 1점(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서 5점(과거와 완전히 달라짐) 사이로 평가하게 한 결과, 5년 전(2014년)에 비해 달라졌다(4점+5점)는 응답은 40% 이상, 10년 전(2009년)에 비해 달라졌다는 응답은 70% 이상, 20년 전(1999년) 대비 달라졌다는 응답과 30년 전(1989년) 대비 달라졌다는 응답은 각각 80% 이상으로 나타남.
 - 특히, 응답자의 70% 이상은 30년 전에 비해 현재 우리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인식하고 있음.
- 5년 전 대비 현재 우리 삶의 모습 변화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3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전에 비해서는 4점~5점 사이로 변화를 크게 인식하고 있음
 - 한편, 60대에서는 과거 대비 삶의 모습 변화에 대한 인식이 타 연령층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남.

과거 대비 현재 우리 삶의 모습 변화

(n=3,000,%)



※ '가' 타입(n=1,500)과 '나' 타입(n=1,500)의 조사 결과를 통합하여 결과를 산출함
 ※ 20년 전 변화 인식 및 30년 전 변화 인식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4.1%, 9.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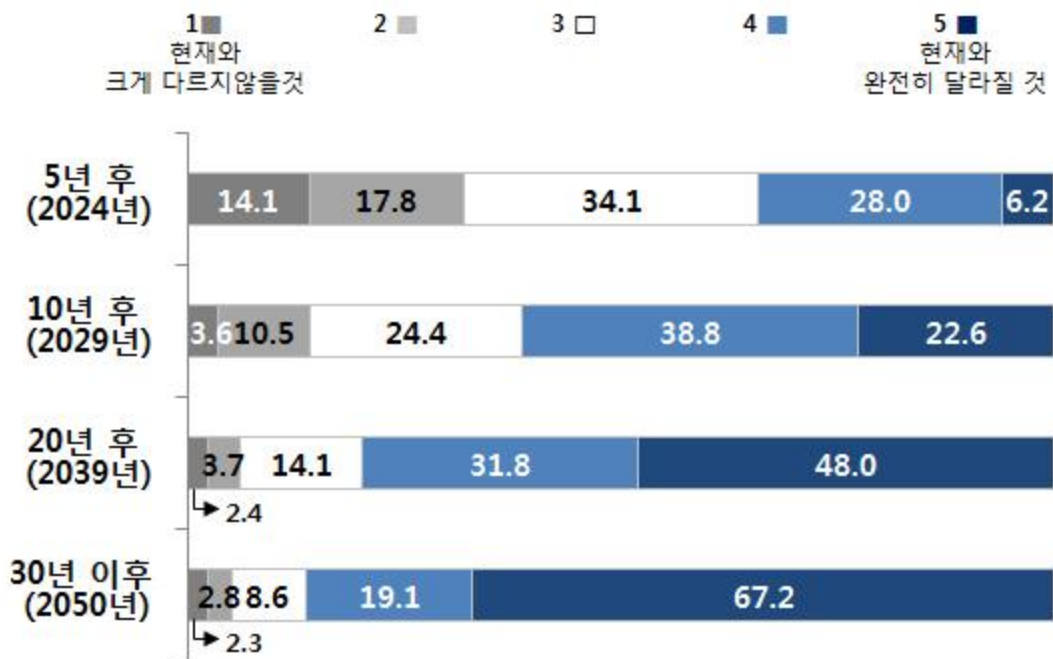
※ 점수가 높을수록, 변화가 크다고 인식

과거 대비 변화 : 5점 평균(점)		사례수	5년 전 (2014년)	10년 전 (2009년)	20년 전 (1999년)	30년 전 (1989년)
전체		(3000)	3.17	3.87	4.44	4.63
연령별	15세~18세	(177)	3.26	4.09	4.57	4.66
	19세~29세	(586)	3.19	4.02	4.52	4.59
	30대	(578)	3.21	3.92	4.51	4.65
	40대	(676)	3.18	3.83	4.41	4.63
	50대	(672)	3.18	3.81	4.41	4.66
	60세~65세	(311)	2.94	3.61	4.29	4.58
지역별	서울	(585)	3.19	3.93	4.47	4.67
	경기/인천	(938)	3.14	3.87	4.47	4.64
	대전/세종/충청	(313)	3.11	3.84	4.45	4.62
	광주/전라	(287)	3.14	3.75	4.29	4.51
	대구/경북	(292)	3.20	3.88	4.42	4.58
	부산/울산/경남	(460)	3.24	3.91	4.49	4.67
	강원/제주	(125)	3.14	3.81	4.41	4.66
직업별	화이트칼라	(1375)	3.19	3.91	4.50	4.66
	블루칼라	(427)	3.07	3.72	4.29	4.51
	자영업	(201)	3.13	3.78	4.41	4.67
	주부	(364)	3.16	3.84	4.40	4.65
	학생	(393)	3.21	4.08	4.60	4.70
	무직, 기타	(240)	3.16	3.74	4.31	4.50

3. 미래 우리 삶의 모습 변화 예상

- 현재 대비 미래의 우리 삶의 모습을 기간별로 1점(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에서 5점(현재와 완전히 달라질 것) 사이로 평가하게 한 결과, 현재 대비 달라질 것이라는 응답은(4점+5점) 5년 후(2024년)가 30% 이상, 10년 후(2029년) 60% 이상, 20년 후(2039년) 80% 가량, 30년 이후(2050년)는 85% 이상으로 나타남.
 - 특히, 응답자의 70% 가량은 30년 이후 미래 삶의 모습이 현재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5년 후 미래 우리 삶의 모습 변화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3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20년 후에 미래에 대해서는 4점~5점 사이로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함.

현재 대비 미래 우리 삶의 모습 변화 예상 (n=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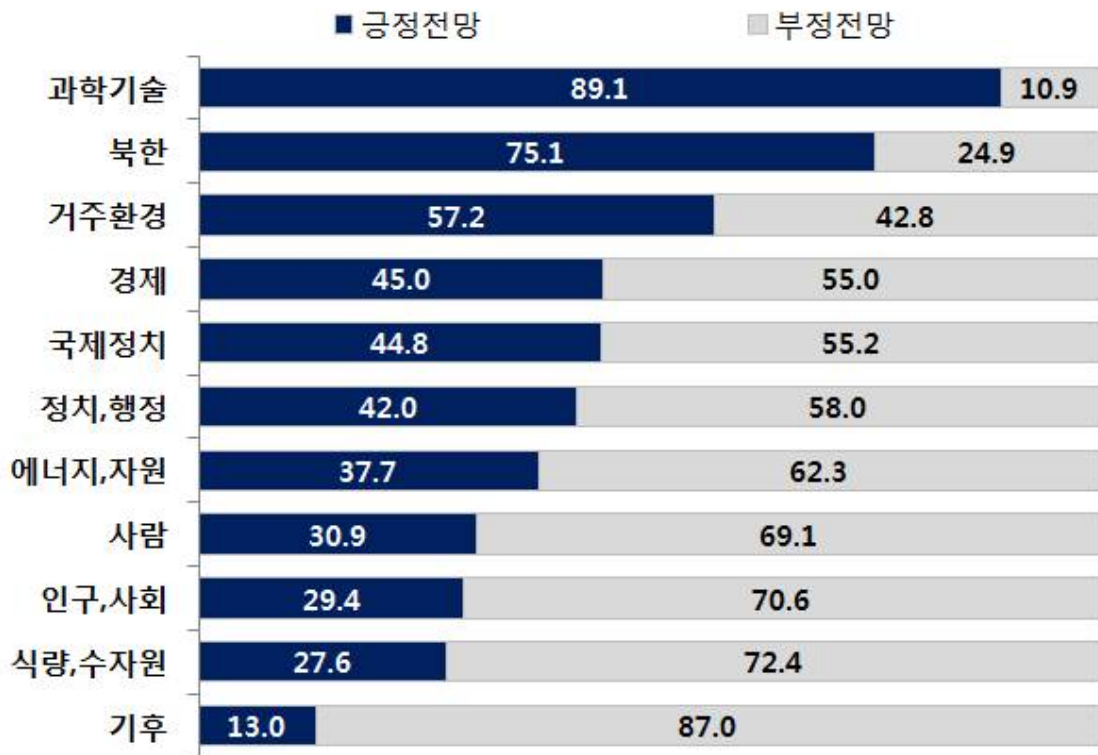
※ 점수가 높을수록, 변화가 클 것이라고 예상

미래 변화 예상 : 5점 평균(점)		사례수	5년 후 (2024년)	10년 후 (2029년)	20년 후 (2039년)	30년 이후 (2050년)
전체		(3000)	2.94	3.66	4.19	4.46
연령별	15세~18세	(177)	2.84	3.71	4.26	4.56
	19세~29세	(586)	2.95	3.74	4.25	4.49
	30대	(578)	2.92	3.67	4.19	4.48
	40대	(676)	2.97	3.66	4.15	4.41
	50대	(672)	3.00	3.63	4.19	4.44
	60세~65세	(311)	2.84	3.57	4.17	4.46
지역별	서울	(585)	3.00	3.71	4.24	4.50
	경기/인천	(938)	2.93	3.66	4.20	4.48
	대전/세종/충청	(313)	2.90	3.66	4.20	4.50
	광주/전라	(287)	2.97	3.63	4.11	4.33
	대구/경북	(292)	2.92	3.61	4.11	4.39
	부산/울산/경남	(460)	2.95	3.67	4.24	4.50
	강원/제주	(125)	2.84	3.57	4.09	4.42
직업별	화이트칼라	(1375)	2.96	3.69	4.20	4.47
	블루칼라	(427)	2.89	3.55	4.08	4.34
	자영업	(201)	3.08	3.74	4.24	4.51
	주부	(364)	2.95	3.67	4.23	4.51
	학생	(393)	2.85	3.69	4.24	4.53
	무직, 기타	(240)	2.98	3.61	4.19	4.42

4. 30년 후, 분야별 변화 예상

- 기후, 에너지, 자원 등 11개 분야별로 30년 후 변화 방향을 물은 결과, '기후', '에너지, 자원', '식량, 수자원', '인구, 사회', '사람(human, 인간관계)', '정치, 행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긍정 전망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기후'에 대한 부정전망은 87.0%로 10명 중 9명가량이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 한편, '북한', '과학기술', '거주환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음. 특히,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90% 가량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국제정치', '경제'에 대해서는 긍/부정 전망이 40~50% 수준으로 비슷함.
 - 50~60대에서는 분야별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20~40대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30년 후 변화 예상 (n=3,000,%)



※ '가' 타입(n=1,500)과 '나' 타입(n=1,500)의 조사 결과를 통합하여 결과를 산출함

30년 후 분야별 변화 예상 (%)		사례수	과학기술 (IT/BT/ST)		북한		거주환경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전체		(3,000)	89.1	10.9	75.1	24.9	57.2	42.8
연령별	15세~18세	(177)	89.8	10.2	74.9	25.1	60.7	39.3
	19세~29세	(586)	88.2	11.8	67.2	32.8	57.4	42.6
	30대	(578)	87.7	12.3	74.2	25.8	52.8	47.2
	40대	(676)	88.2	11.8	79.9	20.1	59.5	40.5
	50대	(672)	90.9	9.1	80.5	19.5	58.4	41.6
	60세~65세	(311)	90.6	9.4	69.6	30.4	55.1	44.9
이념 성향별	진보	(959)	92.1	7.9	87.2	12.8	58.3	41.7
	중도	(1552)	88.0	12.0	72.7	27.3	56.7	43.3
	보수	(489)	86.4	13.6	59.0	41.0	56.5	43.5
직업별	화이트칼라	(1375)	88.6	11.4	76.1	23.9	56.4	43.6
	블루칼라	(427)	86.5	13.5	76.4	23.6	56.6	43.4
	자영업	(201)	92.5	7.5	79.4	20.6	59.1	40.9
	주부	(364)	89.2	10.8	75.3	24.7	57.4	42.6
	학생	(393)	90.9	9.1	71.7	28.3	61.0	39.0
	무직, 기타	(240)	90.2	9.8	68.4	31.6	54.8	45.2

분야별 변화 예상 (%)		사례수	경제		국제정치		정치, 행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전체		(3,000)	45.0	55.0	44.8	55.2	42.0	58.0
연령별	15세~18세	(177)	42.2	57.8	37.9	62.1	32.6	67.4
	19세~29세	(586)	35.0	65.0	39.4	60.6	36.0	64.0
	30대	(578)	38.2	61.8	40.1	59.9	36.6	63.4
	40대	(676)	47.4	52.6	41.5	58.5	42.9	57.1
	50대	(672)	53.1	46.9	54.0	46.0	48.9	51.1
	60세~65세	(311)	55.3	44.7	54.7	45.3	52.0	48.0
이념 성향별	진보	(959)	51.2	48.8	51.8	48.2	48.8	51.2
	중도	(1552)	42.6	57.4	41.7	58.3	39.7	60.3
	보수	(489)	40.3	59.7	40.6	59.4	36.1	63.9
직업별	화이트칼라	(1375)	44.1	55.9	41.9	58.1	41.0	59.0
	블루칼라	(427)	48.0	52.0	48.9	51.1	44.0	56.0
	자영업	(201)	52.3	47.7	48.3	51.7	46.6	53.4
	주부	(364)	46.0	54.0	52.8	47.2	45.2	54.8
	학생	(393)	39.9	60.1	41.2	58.8	36.9	63.1
	무직, 기타	(240)	45.3	54.7	44.2	55.8	43.6	56.4

분야별 변화 예상 (%)		사례수	에너지, 자원		사람 (human, 인간관계)		인구, 사회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전체		(3,000)	37.7	62.3	30.9	69.1	29.4	70.6
연령별	15세~18세	(177)	43.8	56.2	36.7	63.3	30.5	69.5
	19세~29세	(586)	41.8	58.2	28.4	71.6	28.8	71.2
	30대	(578)	34.2	65.8	25.2	74.8	27.6	72.4
	40대	(676)	31.3	68.7	29.6	70.4	28.0	72.0
	50대	(672)	40.0	60.0	34.7	65.3	31.9	68.1
	60세~65세	(311)	41.5	58.5	37.5	62.5	31.3	68.7
이념 성향별	진보	(959)	39.8	60.2	33.6	66.4	30.2	69.8
	중도	(1552)	37.6	62.4	29.5	70.5	29.8	70.2
	보수	(489)	33.6	66.4	30.0	70.0	26.9	73.1
직업별	화이트칼라	(1375)	35.4	64.6	29.5	70.5	28.0	72.0
	블루칼라	(427)	42.4	57.6	34.4	65.6	32.7	67.3
	자영업	(201)	34.6	65.4	34.0	66.0	33.0	67.0
	주부	(364)	35.9	64.1	27.8	72.2	26.4	73.6
	학생	(393)	41.2	58.8	33.1	66.9	30.2	69.8
	무직, 기타	(240)	41.8	58.2	31.4	68.6	32.4	67.6

분야별 변화 예상 (%)		사례수	식량, 수자원		기후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전체		(3,000)	27.6	72.4	13.0	87.0
연령별	15세~18세	(177)	40.3	59.7	8.1	91.9
	19세~29세	(586)	31.9	68.1	9.5	90.5
	30대	(578)	22.9	77.1	10.0	90.0
	40대	(676)	20.9	79.1	12.9	87.1
	50대	(672)	29.2	70.8	16.7	83.3
	60세~65세	(311)	31.7	68.3	19.7	80.3
이념 성향별	진보	(959)	28.4	71.6	11.9	88.1
	중도	(1552)	27.5	72.5	13.3	86.7
	보수	(489)	26.2	73.8	14.1	85.9
직업별	화이트칼라	(1375)	24.2	75.8	12.3	87.7
	블루칼라	(427)	29.7	70.3	19.5	80.5
	자영업	(201)	26.7	73.3	15.9	84.1
	주부	(364)	25.5	74.5	11.1	88.9
	학생	(393)	36.5	63.5	7.0	93.0
	무직, 기타	(240)	32.2	67.8	15.1	84.9

※ 미래 정책 방향 선호도 - 요약

구분	의견1	의견2	GAP (절대값)
이민정책	노동이민은 가능한 억제	이민 정책 확대	-
	49.0	51.0	2.1
환경정책	플라스틱 제품 소비 규제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신기술 투자 확대	-
	53.6	46.4	7.1
외교안보정책	한-중 우호, 한-미동맹 강화	미-중 사이에 중재자/균형자	-
	46.3	53.7	7.5
부동산 정책	토지공개념 제한적 적용	토지공개념 대폭 강화	-
	45.5	54.5	9.0
복지정책방향	선별복지로 국가 재정부담 완화	국민 전체 대상 보편복지 실현	-
	54.7	45.3	9.5
지방분권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불필요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추진	-
	56.3	43.7	12.5
가족 제도	현재의 가족형태만 인정	생활공동체도 가족으로 인정	-
	40.1	59.9	19.7
빅데이터의 활용	빅데이터 악용 가능성 차단	빅데이터 적극 활용	-
	61.7	38.3	23.3
정치갈등	사회적·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정책	다원성,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책 추진	-
	37.4	62.6	25.2
인공지능 노동정책방향	인공지능 개발 통제 정책 불필요	인공지능 조절·통제하는 정책	-
	35.8	64.2	28.4
인공지능 의사결정	인공지능 제한적 활용	인공지능 적극 확산	-
	66.5	33.5	33.0
인프라 정책	생활기반시설 유지·확충	인구 적은 지역, 생활기반시설 축소	-
	66.6	33.4	33.2
기후와 에너지 정책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	과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
	66.9	33.1	33.8
인간 존엄과 생명기술	생명 기술 엄격한 규제	생명 기술 적극적 정책 지원	-
	67.9	32.1	35.8
안락사	안락사 허용 반대	안락사 허용 찬성	-
	27.5	72.5	44.9
식량자원정책	GMO작물 재배·수입 제한	GMO작물 재배·수입 허용	-
	75.1	24.9	50.3
우주 개발	우주개발 소극적 투자	우주개발 적극적 투자	-
	21.1	78.9	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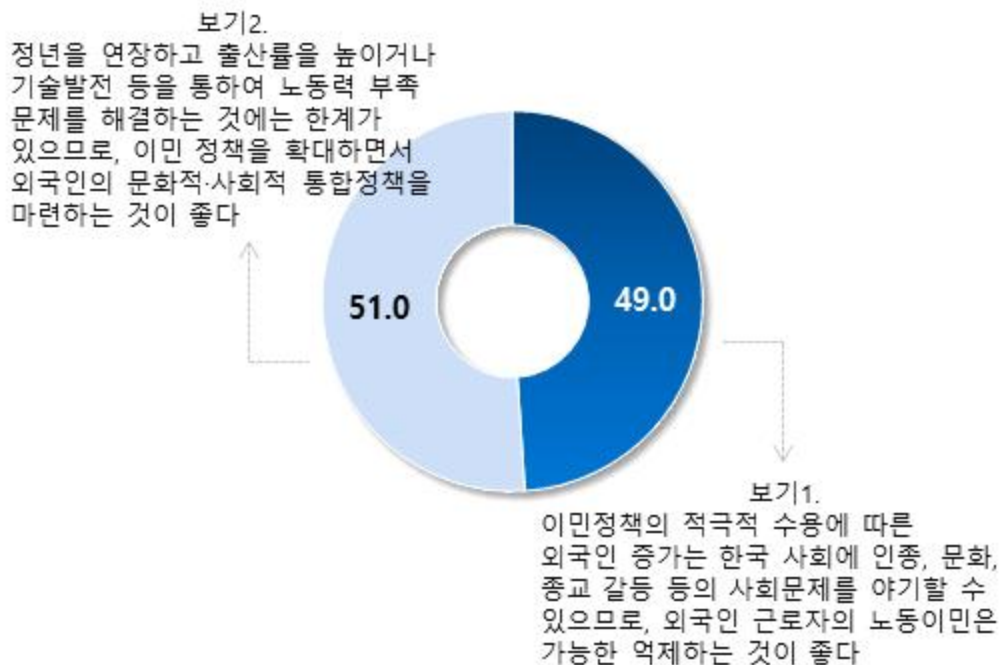
Ⅱ 미래 정책 방향 선호도

1. 이민 정책

-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 정책 방향에 대해, '이민정책의 적극적 수용에 따른 외국인 증가는 한국 사회에 인종, 문화, 종교 갈등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이민은 가능한 억제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9.0%, '정년을 연장하고 출산률을 높이거나 기술발전 등을 통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민 정책을 확대하면서 외국인의 문화적·사회적 통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0%로 이민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이민 억제 정책을 선호하는 응답은 '20대', '주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민정책 확대 및 문화/사회 통합정책 마련을 선호하는 응답은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이념성향 별로도 진보, 중도, 보수 모두에서 정책 선호도가 팽팽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 함
- 17개 정책선호도 조사 주제 중 가장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로, 이민정책과 관련해서는 향후 정책 방향 설정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노동력 부족 문제 정책 방향

(n=1,500,%)



※ 정책미래에 대한 설명문은 부록1. 설문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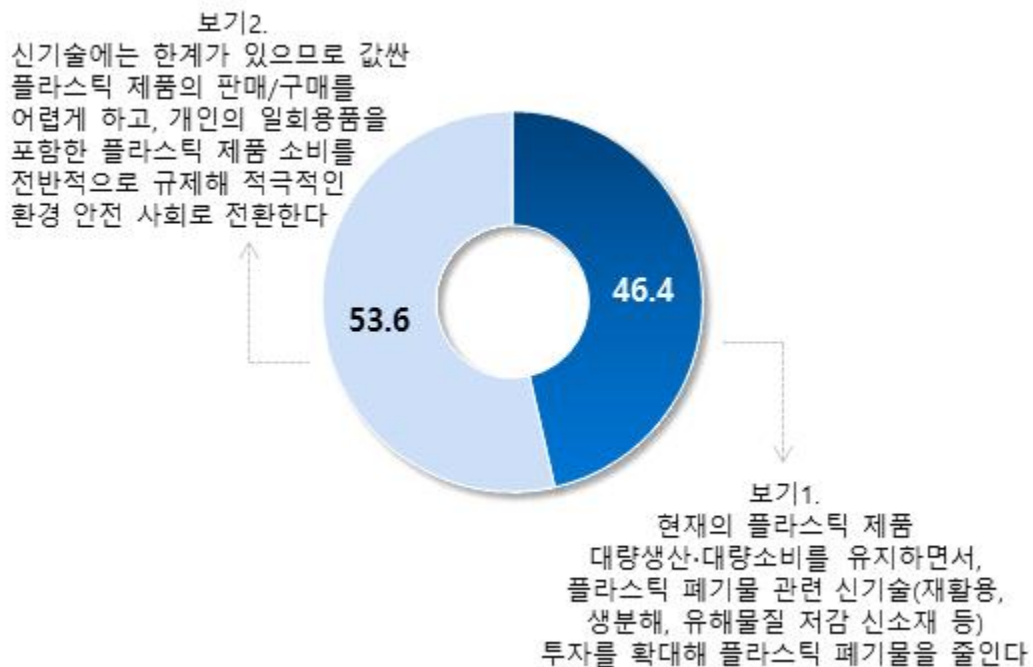
이민 정책 (%)		사례수	이민정책의 적극적 수용에 따른 외국인 증가는 사회 문제를 야기,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이민은 가능한 억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는 한계, 이민 정책을 확대하면서 외국인의 문화적·사회적 통합정책 마련
전체		(1500)	49.0	51.0
연령별	15세~18세	(87)	44.9	55.1
	19세~29세	(295)	54.3	45.7
	30대	(285)	52.5	47.5
	40대	(340)	48.4	51.6
	50대	(336)	43.7	56.3
	60세~65세	(157)	47.2	52.8
이념 성향별	진보	(474)	45.5	54.5
	중도	(775)	50.1	49.9
	보수	(251)	51.9	48.1
직업별	화이트칼라	(679)	46.7	53.3
	블루칼라	(221)	49.0	51.0
	자영업	(99)	48.2	51.8
	주부	(177)	54.9	45.1
	학생	(194)	49.6	50.4
	무직, 기타	(130)	52.4	47.6
기후	긍정 변화예상	(183)	48.9	51.1
	부정 변화예상	(1317)	49.0	51.0
에너지, 자원	긍정 변화예상	(565)	49.1	50.9
	부정 변화예상	(935)	48.8	51.2
식량, 수자원	긍정 변화예상	(421)	47.5	52.5
	부정 변화예상	(1079)	49.5	50.5
국제 정치	긍정 변화예상	(677)	47.0	53.0
	부정 변화예상	(823)	50.6	49.4
북한	긍정 변화예상	(1107)	47.7	52.3
	부정 변화예상	(393)	52.5	47.5
과학 기술	긍정 변화예상	(1321)	48.6	51.4
	부정 변화예상	(179)	51.3	48.7
경제	긍정 변화예상	(666)	45.9	54.1
	부정 변화예상	(834)	51.4	48.6
거주 환경	긍정 변화예상	(854)	47.7	52.3
	부정 변화예상	(646)	50.6	49.4
인구, 사회	긍정 변화예상	(432)	46.8	53.2
	부정 변화예상	(1068)	49.8	50.2
정치, 행정	긍정 변화예상	(631)	45.7	54.3
	부정 변화예상	(869)	51.3	48.7
사람	긍정 변화예상	(459)	44.8	55.2
	부정 변화예상	(1041)	50.8	49.2

2. 환경 정책

-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신기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값싼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구매를 어렵게 하고, 개인의 일회용품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 소비를 전반적으로 규제해 적극적인 환경 안전 사회로 전환'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응답이 53.6%, '현재의 플라스틱 제품 대량생산대량소비를 유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신기술(재활용, 생분해, 유해물질 저감 신소재 등) 투자를 확대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을 선호하는 응답이 46.4%로 정책 선호도가 엇갈림.
 - 현재의 소비를 유지하며 신기술 투자를 선호하는 응답은 '10대 및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기후', '식량, 수자원'에 대한 미래 전망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미세플라스틱 관련 환경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부각된 이슈로 GMO 식량 정책 관련 선호도를 고려할 때, 향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될 경우 정책선호도가 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

(n=1,500,%)



※ 정책미래에 대한 설명문은 부록1. 설문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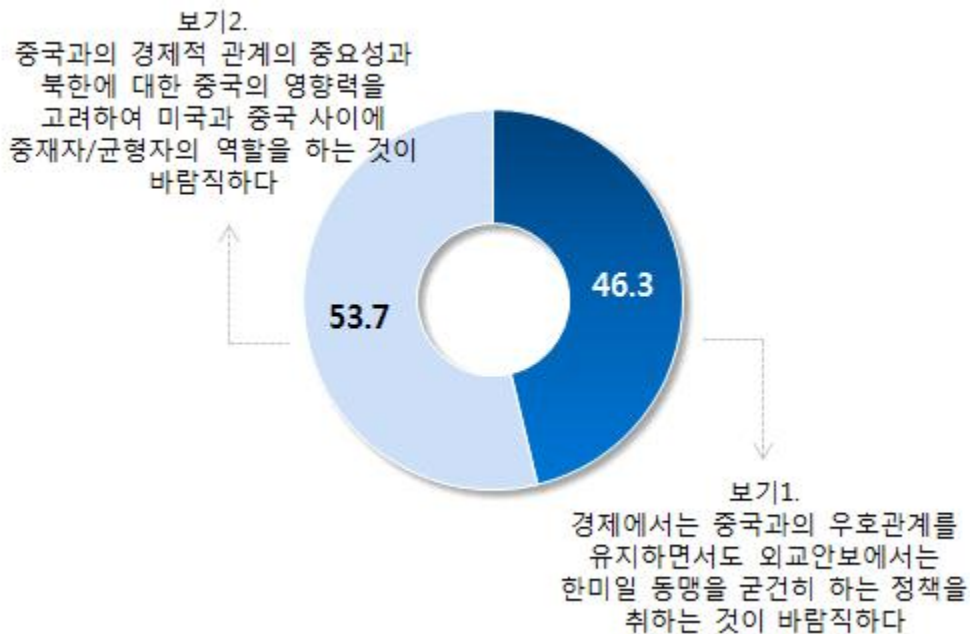
환경 정책 (%)		사례수	현재의 플라스틱 제품 대량생산대량소비를 유지, 관련 신기술 투자를 확대,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인다	신기술에는 한계, 값싼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구매를 어렵게 하고, 개인의 플라스틱 제품 소비를 전반적으로 규제
전체		(1500)	46.4	53.6
연령별	15세~18세	(87)	61.4	38.6
	19세~29세	(295)	53.9	46.1
	30대	(285)	47.6	52.4
	40대	(340)	43.9	56.1
	50대	(336)	41.3	58.7
	60세~65세	(157)	38.6	61.4
이념 성향별	진보	(474)	43.5	56.5
	중도	(775)	48.7	51.3
	보수	(251)	44.9	55.1
성별	남자	(764)	51.0	49.0
	여자	(736)	41.7	58.3
자녀 연령대	자녀 없음	(705)	50.4	49.6
	미취학	(148)	50.0	50.0
	초/중/고 재학중	(300)	44.3	55.7
	20대 이상 성인	(445)	39.8	60.2
기후	긍정 변화예상	(183)	50.2	49.8
	부정 변화예상	(1317)	45.9	54.1
에너지, 자원	긍정 변화예상	(565)	46.7	53.3
	부정 변화예상	(935)	46.3	53.7
식량, 수자원	긍정 변화예상	(421)	47.2	52.8
	부정 변화예상	(1079)	46.1	53.9
국제 정치	긍정 변화예상	(677)	46.4	53.6
	부정 변화예상	(823)	46.4	53.6
북한	긍정 변화예상	(1107)	44.5	55.5
	부정 변화예상	(393)	51.8	48.2
과학 기술	긍정 변화예상	(1321)	46.8	53.2
	부정 변화예상	(179)	43.8	56.2
경제	긍정 변화예상	(666)	46.0	54.0
	부정 변화예상	(834)	46.8	53.2
거주 환경	긍정 변화예상	(854)	48.2	51.8
	부정 변화예상	(646)	44.1	55.9
인구, 사회	긍정 변화예상	(432)	50.5	49.5
	부정 변화예상	(1068)	44.8	55.2
정치, 행정	긍정 변화예상	(631)	46.2	53.8
	부정 변화예상	(869)	46.6	53.4
사람	긍정 변화예상	(459)	48.0	52.0
	부정 변화예상	(1041)	45.8	54.2

3. 외교안보 정책

- 미래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견제 강화 속에서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에서는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외교안보에서는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6.3%,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의 중요성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재자/균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3.7%로 서로 비슷하게 나타남.
 -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중재자/균형자 역할 정책 선호 응답은 '30대', 이념성향 '진보', '자유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외교안보에서는 한미일 동맹 정책 선호 응답은 '20대' 및 '60대', 이념성향 '보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30년 후 '북한'의 변화 방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외교안보에서는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는 정책방향을 선호하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높은 반면,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재자/균형자 역할을 선호하는 응답이 58.9%로 높았음.

한중미일 관계 관련 정책 방향

(n=1,500,%)



※ 정책미래에 대한 설명문은 부록1. 설문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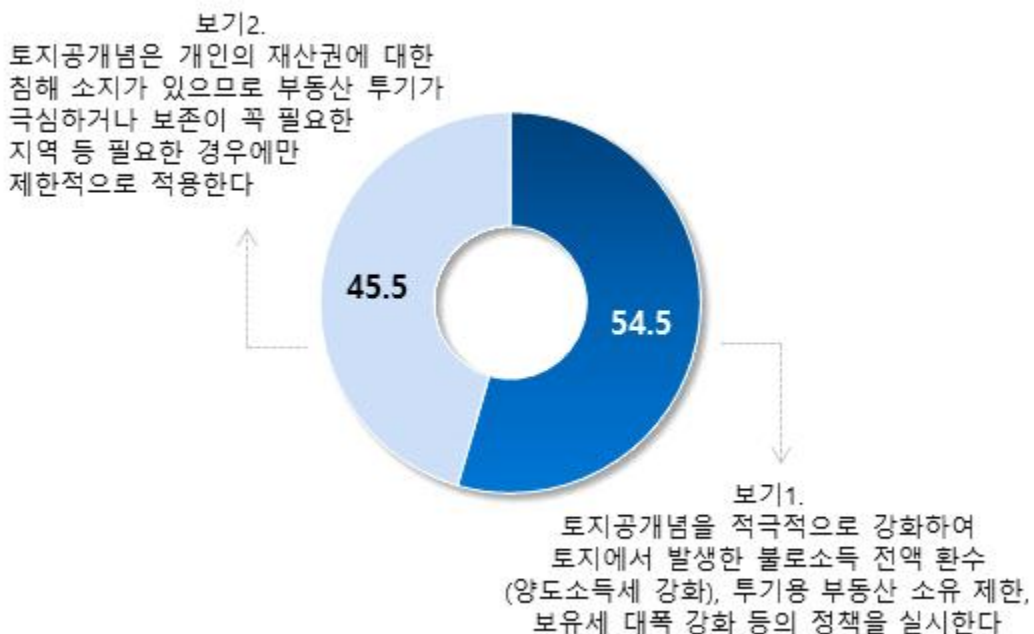
외교안보 정책 (%)		사례수	경제에서는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외교안보에서는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의 중요성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재자/균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
전체		(1500)	46.3	53.7
연령별	15세~18세	(87)	42.2	57.8
	19세~29세	(295)	54.3	45.7
	30대	(285)	40.9	59.1
	40대	(340)	43.1	56.9
	50대	(336)	44.4	55.6
	60세~65세	(157)	53.9	46.1
이념 성향별	진보	(481)	37.2	62.8
	중도	(782)	47.6	52.4
	보수	(237)	60.1	39.9
직업별	화이트칼라	(696)	45.1	54.9
	블루칼라	(206)	43.9	56.1
	자영업	(102)	38.7	61.3
	주부	(189)	52.3	47.7
	학생	(196)	51.4	48.6
	무직, 기타	(112)	45.3	54.7
기후	긍정 변화예상	(206)	42.2	57.8
	부정 변화예상	(1294)	46.9	53.1
에너지, 자원	긍정 변화예상	(569)	44.9	55.1
	부정 변화예상	(931)	47.1	52.9
식량, 수자원	긍정 변화예상	(411)	43.4	56.6
	부정 변화예상	(1089)	47.3	52.7
국제 정치	긍정 변화예상	(672)	42.3	57.7
	부정 변화예상	(828)	49.4	50.6
북한	긍정 변화예상	(1145)	41.1	58.9
	부정 변화예상	(355)	62.9	37.1
과학 기술	긍정 변화예상	(1350)	45.2	54.8
	부정 변화예상	(150)	55.8	44.2
경제	긍정 변화예상	(687)	42.7	57.3
	부정 변화예상	(813)	49.3	50.7
거주 환경	긍정 변화예상	(863)	45.3	54.7
	부정 변화예상	(637)	47.5	52.5
인구, 사회	긍정 변화예상	(455)	42.5	57.5
	부정 변화예상	(1045)	47.9	52.1
정치, 행정	긍정 변화예상	(635)	42.3	57.7
	부정 변화예상	(865)	49.1	50.9
사람	긍정 변화예상	(472)	43.8	56.2
	부정 변화예상	(1028)	47.4	52.6

4. 부동산 정책

- 부동산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토지공개념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토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 전액 환수(양도소득세 강화), 투기용 부동산 소유 제한, 보유세 대폭 강화 등의 정책'을 선호하는 경우가 54.5%로 절반 이상이나, '토지공개념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부동산 투기가 극심하거나 보존이 꼭 필요한 지역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을 선호하는 응답도 45.5%로 의견이 나뉨.
 - 토지공개념을 적극적으로 강화한 정책을 선호하는 응답은 이념성향 '진보',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한편 토지공개념을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응답은 이념성향 '보수', 소득수준 '800만원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우리나라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전 세대, 계층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 미래정책 방향 수립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부동산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n=1,500,%)



※ 정책미래에 대한 설명문은 부록1. 설문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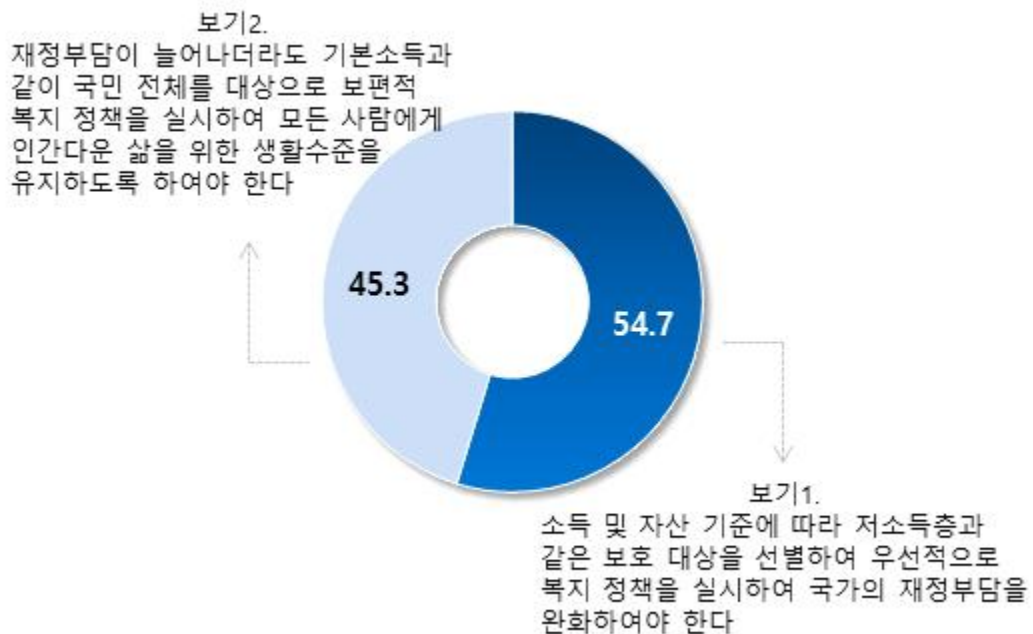
부동산 정책 (%)		사례수	토지공개념을 강화, 토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 전액 환수 (양도소득세 강화), 투기용 부동산 소유 제한, 보유세 대폭 강화 등의 정책을 실시	토지공개념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부동산 투기가 극심하거나 보존이 필요한 지역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전체		(1500)	54.5	45.5
연령별	15세~18세	(87)	51.3	48.7
	19세~29세	(295)	55.0	45.0
	30대	(285)	57.0	43.0
	40대	(340)	56.5	43.5
	50대	(336)	51.8	48.2
	60세~65세	(157)	52.0	48.0
이념 성향별	진보	(481)	63.2	36.8
	중도	(782)	52.6	47.4
	보수	(237)	42.9	57.1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173)	59.0	41.0
	200~400만원미만	(481)	54.5	45.5
	400~600만원미만	(446)	54.4	45.6
	600~800만원미만	(224)	56.8	43.2
	800만원 이상	(176)	47.1	52.9
기후	긍정 변화예상	(206)	50.5	49.5
	부정 변화예상	(1294)	55.1	44.9
에너지, 자원	긍정 변화예상	(569)	54.5	45.5
	부정 변화예상	(931)	54.5	45.5
식량, 수자원	긍정 변화예상	(411)	55.3	44.7
	부정 변화예상	(1089)	54.2	45.8
국제 정치	긍정 변화예상	(672)	55.5	44.5
	부정 변화예상	(828)	53.7	46.3
북한	긍정 변화예상	(1145)	58.8	41.2
	부정 변화예상	(355)	40.6	59.4
과학 기술	긍정 변화예상	(1350)	54.7	45.3
	부정 변화예상	(150)	52.8	47.2
경제	긍정 변화예상	(687)	56.0	44.0
	부정 변화예상	(813)	53.2	46.8
거주 환경	긍정 변화예상	(863)	54.8	45.2
	부정 변화예상	(637)	54.0	46.0
인구, 사회	긍정 변화예상	(455)	56.3	43.7
	부정 변화예상	(1045)	53.7	46.3
정치, 행정	긍정 변화예상	(635)	58.1	41.9
	부정 변화예상	(865)	51.8	48.2
사람	긍정 변화예상	(472)	55.7	44.3
	부정 변화예상	(1028)	53.9	46.1

5. 복지 정책

- 소득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중산층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과 같은 보호 대상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복지 정책을 실시하여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54.7%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 그러나 '재정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기본소득과 같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시하여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45.3%로 적지 않아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나누어져 있음.
 - 선별적 복지정책을 선호하는 응답은 '60대', 이념성향 '보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보편적 복지정책을 선호하는 응답은 '10대', 이념성향 '진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예산 문제, 형평성 등으로 인한 '선별적 vs 보편적' 복지 논란은 30년 후 미래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정책 선호가 크게 엇갈리는 팽팽한 이슈인 것으로 나타남.

양극화 심화 시, 국가 복지 정책 방향

(n=1,500,%)



※ 정책미래에 대한 설명문은 부록1. 설문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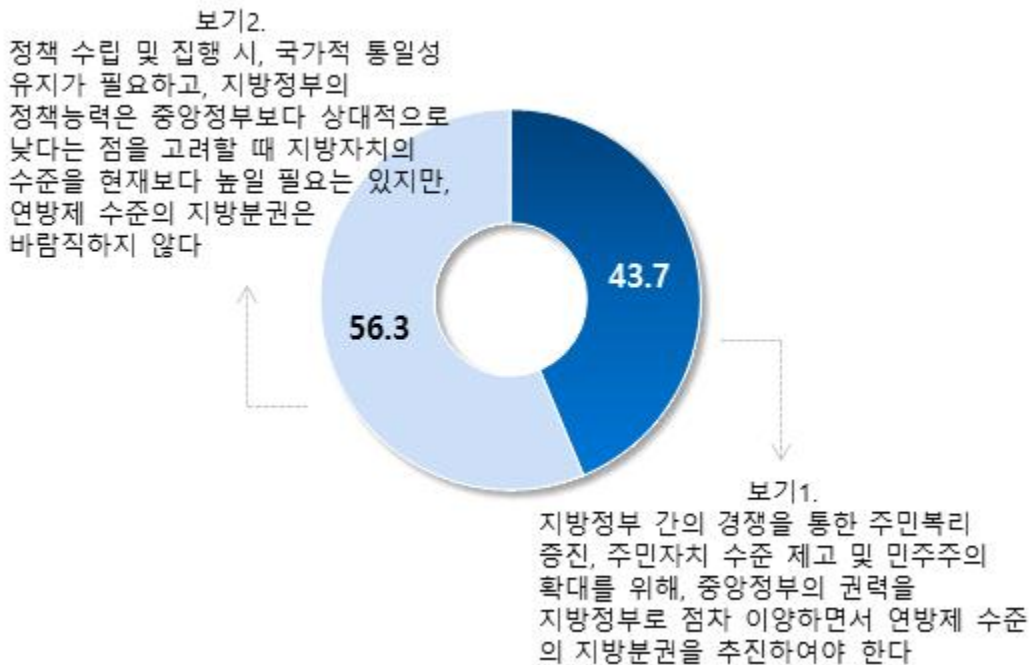
복지 정책 (%)		사례수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과 같은 보호 대상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복지 정책을 실시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을 완화	재정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기본소득과 같이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시하여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전체		(1500)	54.7	45.3
연령별	15세~18세	(87)	48.2	51.8
	19세~29세	(295)	55.5	44.5
	30대	(285)	53.7	46.3
	40대	(340)	54.2	45.8
	50대	(336)	52.3	47.7
	60세~65세	(157)	65.2	34.8
이념 성향별	진보	(474)	48.6	51.4
	중도	(775)	54.1	45.9
	보수	(251)	68.2	31.8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168)	52.8	47.2
	200~400만원미만	(504)	54.4	45.6
	400~600만원미만	(450)	55.4	44.6
	600~800만원미만	(208)	55.8	44.2
	800만원 이상	(171)	54.4	45.6
기후	긍정 변화예상	(183)	47.9	52.1
	부정 변화예상	(1317)	55.7	44.3
에너지, 자원	긍정 변화예상	(565)	53.0	47.0
	부정 변화예상	(935)	55.8	44.2
식량, 수자원	긍정 변화예상	(421)	51.8	48.2
	부정 변화예상	(1079)	55.9	44.1
국제 정치	긍정 변화예상	(677)	53.1	46.9
	부정 변화예상	(823)	56.1	43.9
북한	긍정 변화예상	(1107)	52.0	48.0
	부정 변화예상	(393)	62.3	37.7
과학 기술	긍정 변화예상	(1321)	54.6	45.4
	부정 변화예상	(179)	55.7	44.3
경제	긍정 변화예상	(666)	51.9	48.1
	부정 변화예상	(834)	57.0	43.0
거주 환경	긍정 변화예상	(854)	53.4	46.6
	부정 변화예상	(646)	56.5	43.5
인구, 사회	긍정 변화예상	(432)	50.6	49.4
	부정 변화예상	(1068)	56.4	43.6
정치, 행정	긍정 변화예상	(631)	52.3	47.7
	부정 변화예상	(869)	56.5	43.5
사람	긍정 변화예상	(459)	50.3	49.7
	부정 변화예상	(1041)	56.7	43.3

6. 지방 분권

-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지방분권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정책 수립 및 집행 시, 국가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하고, 지방정부의 정책능력은 중앙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의 수준을 현재보다 높일 필요는 있지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56.3%로 절반 이상임.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이념성향 '보수',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한편, '지방정부 간의 경쟁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주민자치 수준 제고 및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로 점차로 이양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43.7%로 적지 않았음.
- 30년 후 '정치, 행정'의 변화 방향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높은 가운데(긍정전망 42.0% < 부정전망 58.0%) 지방분권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보임.

지방분권화 추진 관련 정책 방향

(n=1,500,%)



※ 정책미래에 대한 설명문은 부록1. 설문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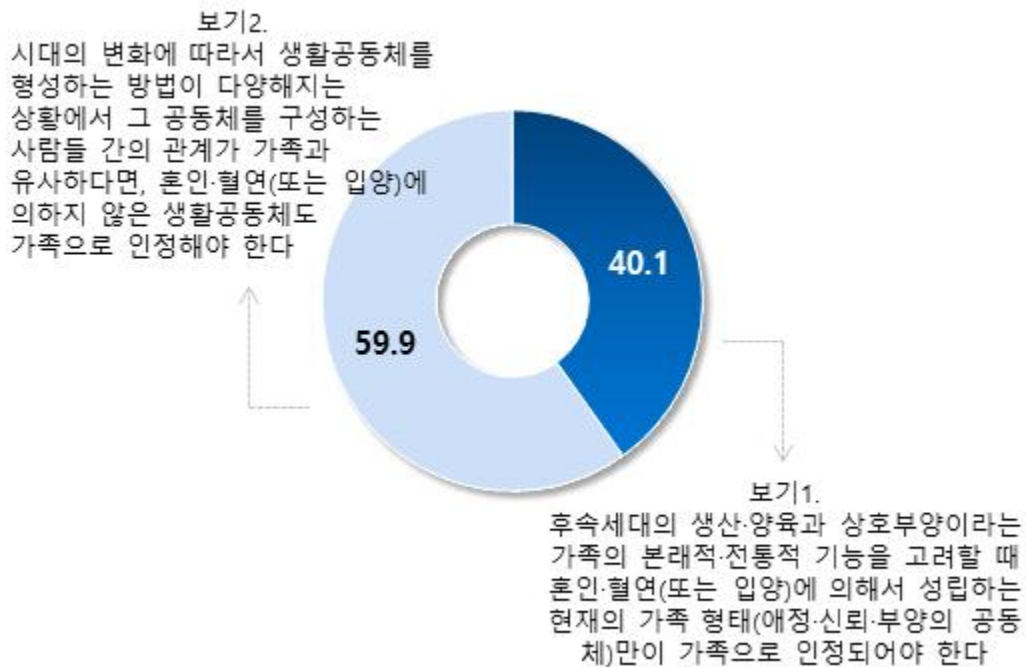
지방 분권 (%)		사례수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로 점차로 이양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	지방자치의 수준을 현재보다 높일 필요는 있지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체		(1500)	43.7	56.3
연령별	15세~18세	(87)	42.6	57.4
	19세~29세	(295)	41.0	59.0
	30대	(285)	46.1	53.9
	40대	(340)	48.2	51.8
	50대	(336)	41.4	58.6
	60세~65세	(157)	40.5	59.5
이념 성향별	진보	(481)	46.1	53.9
	중도	(782)	44.1	55.9
	보수	(237)	37.8	62.2
지역별	서울	(294)	43.5	56.5
	경기/인천	(469)	40.8	59.2
	대전/세종/충청	(154)	39.5	60.5
	광주/전라	(144)	47.4	52.6
	대구/경북	(146)	50.6	49.4
	부산/울산/경남	(230)	46.0	54.0
	강원/제주	(63)	44.7	55.3
기후	긍정 변화예상	(206)	41.6	58.4
	부정 변화예상	(1294)	44.1	55.9
에너지, 자원	긍정 변화예상	(569)	44.0	56.0
	부정 변화예상	(931)	43.6	56.4
식량, 수자원	긍정 변화예상	(411)	42.1	57.9
	부정 변화예상	(1089)	44.4	55.6
국제 정치	긍정 변화예상	(672)	44.6	55.4
	부정 변화예상	(828)	43.1	56.9
북한	긍정 변화예상	(1145)	45.4	54.6
	부정 변화예상	(355)	38.4	61.6
과학 기술	긍정 변화예상	(1350)	43.8	56.2
	부정 변화예상	(150)	43.6	56.4
경제	긍정 변화예상	(687)	44.7	55.3
	부정 변화예상	(813)	42.9	57.1
거주 환경	긍정 변화예상	(863)	43.7	56.3
	부정 변화예상	(637)	43.7	56.3
인구, 사회	긍정 변화예상	(455)	47.4	52.6
	부정 변화예상	(1045)	42.1	57.9
정치, 행정	긍정 변화예상	(635)	44.7	55.3
	부정 변화예상	(865)	43.0	57.0
사람	긍정 변화예상	(472)	49.1	50.9
	부정 변화예상	(1028)	41.3	58.7

7. 가족 제도

- 미래사회에 증가하게 될 새로운 생활공동체에 대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가족과 유사하다면, 혼인·혈연(또는 입양)에 의하지 않은 생활공동체도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9.9%로 '후속세대의 생산·양육과 상호부양이라는 가족의 본래적·전통적 기능을 고려할 때 혼인·혈연(또는 입양)에 의해서 성립하는 현재의 가족 형태(애정·신뢰·부양의 공동체)만이 가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40.1%) 보다 높게 나타남.
 - 현재의 가족 형태만 가족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응답은 '60대', 이념성향 '보수', '기혼'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가족과 유사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응답은 '10대 및 20대', 이념성향 '진보', '미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새로운 생활공동체에 대한 정책 방향

(n=1,500,%)



※ 정책미래에 대한 설명문은 부록1. 설문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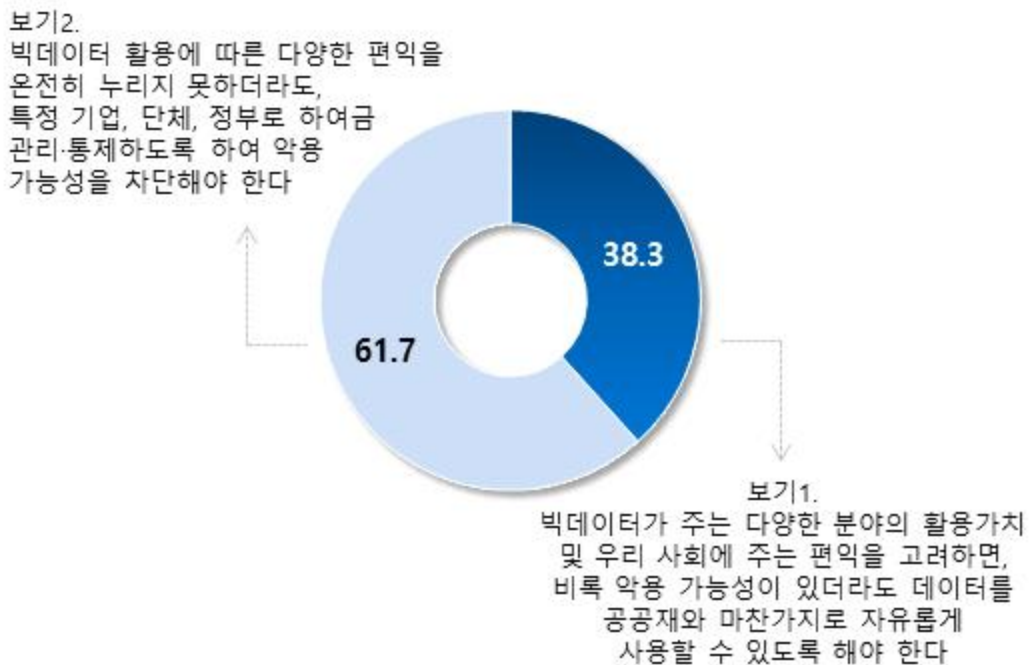
가족 제도 (%)		사례수	혼인·혈연(또는 입양)에 의해서 성립하는 현재의 가족 형태(애정·신뢰·부양의 공동체)만이 가족으로 인정	공동체를 구성하는 관계가 가족과 유사하다면, 혼인·혈연(또는 입양)에 의하지 않은 생활공동체도 가족 인정
전체		(1500)	40.1	59.9
연령별	15세~18세	(87)	31.8	68.2
	19세~29세	(295)	32.1	67.9
	30대	(285)	39.8	60.2
	40대	(340)	38.4	61.6
	50대	(336)	43.9	56.1
	60세~65세	(157)	56.2	43.8
이념 성향별	진보	(481)	33.8	66.2
	중도	(782)	40.0	60.0
	보수	(237)	53.7	46.3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173)	42.2	57.8
	200~400만원미만	(481)	42.7	57.3
	400~600만원미만	(446)	39.9	60.1
	600~800만원미만	(224)	36.8	63.2
	800만원 이상	(176)	35.9	64.1
결혼 여부	기혼	(795)	46.0	54.0
	미혼	(650)	33.3	66.7
	기타	(55)	36.4	63.6
기후	긍정 변화예상	(206)	48.0	52.0
	부정 변화예상	(1294)	38.9	61.1
에너지, 자원	긍정 변화예상	(569)	40.8	59.2
	부정 변화예상	(931)	39.8	60.2
식량, 수자원	긍정 변화예상	(411)	44.1	55.9
	부정 변화예상	(1089)	38.6	61.4
국제 정치	긍정 변화예상	(672)	38.4	61.6
	부정 변화예상	(828)	41.6	58.4
북한	긍정 변화예상	(1145)	37.7	62.3
	부정 변화예상	(355)	48.0	52.0
과학 기술	긍정 변화예상	(1350)	40.0	60.0
	부정 변화예상	(150)	41.4	58.6
경제	긍정 변화예상	(687)	37.9	62.1
	부정 변화예상	(813)	42.0	58.0
거주 환경	긍정 변화예상	(863)	40.9	59.1
	부정 변화예상	(637)	39.1	60.9
인구, 사회	긍정 변화예상	(455)	41.4	58.6
	부정 변화예상	(1045)	39.6	60.4
정치, 행정	긍정 변화예상	(635)	39.7	60.3
	부정 변화예상	(865)	40.5	59.5
사람	긍정 변화예상	(472)	42.6	57.4
	부정 변화예상	(1028)	39.0	61.0

8. 빅데이터의 활용

-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는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다양한 편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더라도, 특정 기업, 단체, 정부로 하여금 관리·통제하도록 하여 악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60% 이상으로 높았음.
- 그러나 '빅데이터가 주는 다양한 분야의 활용가치 및 우리 사회에 주는 편익을 고려하면, 비록 악용 가능성이 있더라도 데이터를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40% 가량(38.3%)으로 적지 않음.
 - 빅데이터의 자유로운 사용을 선호하는 응답은 '20대', '남성', '자영업', '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다수의 응답자가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 관리 및 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빅데이터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보임.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정책 방향

(n=1,500,%)



※ 정책미래에 대한 설명문은 부록1. 설문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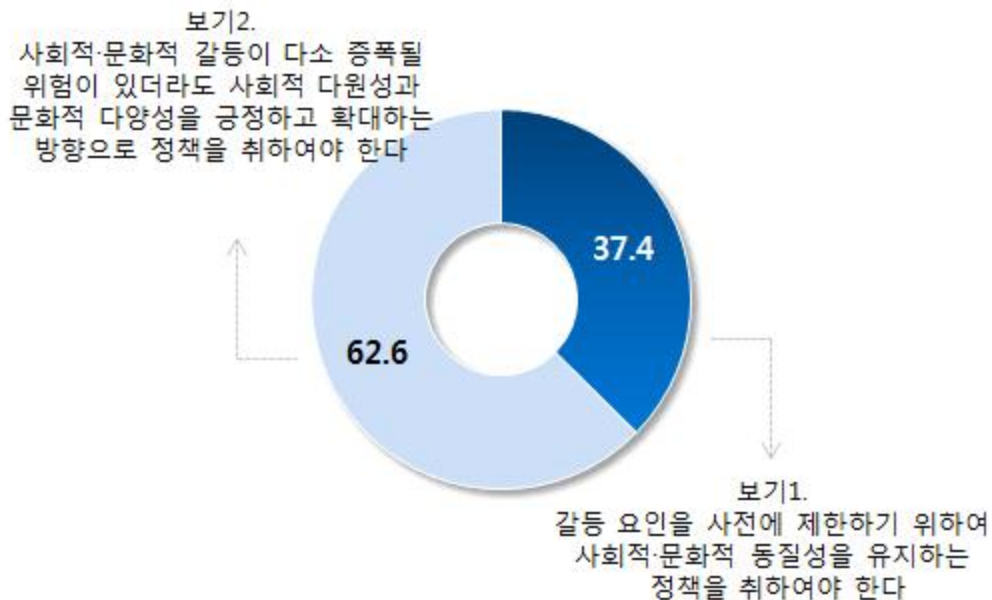
빅데이터의 활용 (%)		사례수	빅데이터의 활용가치 및 편익을 고려, 데이터를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빅데이터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특정 기업, 단체, 정부로 하여금 관리·통제하도록 하여 악용 가능성을 차단
전체		(1500)	38.3	61.7
연령별	15세~18세	(87)	36.5	63.5
	19세~29세	(295)	42.8	57.2
	30대	(285)	38.5	61.5
	40대	(340)	36.9	63.1
	50대	(336)	36.8	63.2
	60세~65세	(157)	37.1	62.9
이념 성향별	진보	(481)	40.7	59.3
	중도	(782)	36.3	63.7
	보수	(237)	40.3	59.7
성별	남자	(764)	45.1	54.9
	여자	(736)	31.3	68.7
직업별	화이트칼라	(696)	38.1	61.9
	블루칼라	(206)	40.0	60.0
	자영업	(102)	45.8	54.2
	주부	(189)	31.5	68.5
	학생	(196)	42.5	57.5
	무직, 기타	(112)	34.1	65.9
기후	긍정 변화예상	(206)	45.2	54.8
	부정 변화예상	(1294)	37.2	62.8
에너지, 자원	긍정 변화예상	(569)	40.0	60.0
	부정 변화예상	(931)	37.3	62.7
식량, 수자원	긍정 변화예상	(411)	41.8	58.2
	부정 변화예상	(1089)	37.0	63.0
국제 정치	긍정 변화예상	(672)	36.3	63.7
	부정 변화예상	(828)	39.9	60.1
북한	긍정 변화예상	(1145)	38.9	61.1
	부정 변화예상	(355)	36.3	63.7
과학 기술	긍정 변화예상	(1350)	38.3	61.7
	부정 변화예상	(150)	38.9	61.1
경제	긍정 변화예상	(687)	38.0	62.0
	부정 변화예상	(813)	38.6	61.4
거주 환경	긍정 변화예상	(863)	38.9	61.1
	부정 변화예상	(637)	37.5	62.5
인구, 사회	긍정 변화예상	(455)	43.9	56.1
	부정 변화예상	(1045)	35.9	64.1
정치, 행정	긍정 변화예상	(635)	38.1	61.9
	부정 변화예상	(865)	38.5	61.5
사람	긍정 변화예상	(472)	42.3	57.7
	부정 변화예상	(1028)	36.5	63.5

9. 정치 갈등

- 미래 한국의 새로운 정치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언어·인종·종교·성정체성·젠더 등에 관해서 정부가 어떠한 방향에서 사회·문화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은지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문화적 갈등이 다소 증폭될 위험이 있더라도 사회적 다원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긍정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높았음.
 - 사회적 다원성/문화적 다양성을 긍정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취해야한다는 응답은 '여자', 이념성향 '진보', 월소득 '400~600미만'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한편 3명 중 1명 이상(37.4%)은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한하기 위하여 사회적·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고 응답함.
 - 사회적 다원성/문화적 동질성 유지를 선호하는 응답은 '10대', 월소득 '200만원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30년 후 '인구/사회', '사람(human, 인간관계)'이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은 가운데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다양성, 다원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인식함.

새로운 정치 갈등 관련 정책 방향

(n=1,500,%)



※ 정책미래에 대한 설명문은 부록1. 설문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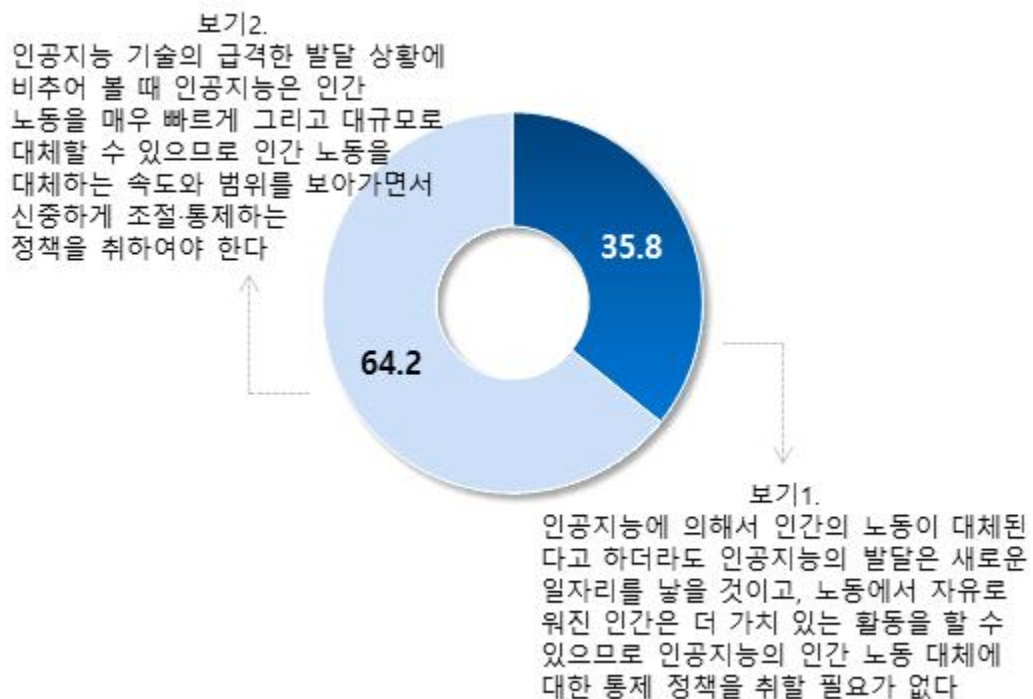
정치 갈등 (%)		사례수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한하기 위하여 사회적·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취하여야	사회적·문화적 갈등이 증폭될 위험이 있더라도 사회적 다원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긍정/확대하는 정책 취하여야
전체		(1500)	37.4	62.6
연령별	15세~18세	(87)	49.0	51.0
	19세~29세	(295)	35.8	64.2
	30대	(285)	39.4	60.6
	40대	(340)	36.7	63.3
	50대	(336)	33.1	66.9
	60세~65세	(157)	40.9	59.1
이념 성향별	진보	(474)	31.4	68.6
	중도	(775)	39.6	60.4
	보수	(251)	41.8	58.2
성별	남자	(764)	40.1	59.9
	여자	(736)	34.5	65.5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168)	43.3	56.7
	200~400만원미만	(504)	38.6	61.4
	400~600만원미만	(450)	33.1	66.9
	600~800만원미만	(208)	39.2	60.8
	800만원 이상	(171)	37.1	62.9
기후	긍정 변화예상	(183)	43.6	56.4
	부정 변화예상	(1317)	36.5	63.5
에너지, 자원	긍정 변화예상	(565)	37.2	62.8
	부정 변화예상	(935)	37.5	62.5
식량, 수자원	긍정 변화예상	(421)	38.3	61.7
	부정 변화예상	(1079)	37.0	63.0
국제 정치	긍정 변화예상	(677)	33.7	66.3
	부정 변화예상	(823)	40.4	59.6
북한	긍정 변화예상	(1107)	33.7	66.3
	부정 변화예상	(393)	47.7	52.3
과학 기술	긍정 변화예상	(1321)	36.4	63.6
	부정 변화예상	(179)	44.8	55.2
경제	긍정 변화예상	(666)	35.0	65.0
	부정 변화예상	(834)	39.3	60.7
거주 환경	긍정 변화예상	(854)	35.8	64.2
	부정 변화예상	(646)	39.4	60.6
인구, 사회	긍정 변화예상	(432)	37.1	62.9
	부정 변화예상	(1068)	37.5	62.5
정치, 행정	긍정 변화예상	(631)	32.1	67.9
	부정 변화예상	(869)	41.2	58.8
사람	긍정 변화예상	(459)	38.7	61.3
	부정 변화예상	(1041)	36.8	63.2

10. 노동 정책

- 인공지능에 의해서 저숙련 노동뿐만 아니라 숙련노동 및 정신노동도 대폭적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노동정책 방향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인공지능은 인간 노동을 매우 빠르게 그리고 대규모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와 범위를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조절·통제하는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64.2%로 높게 나타남.
- 한편, 3명 중 1명 정도(35.8%)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의 노동이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의 발달은 새로운 일자리를 낳을 것이고, 노동에서 자유로워진 인간은 더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의 인간 노동 대체에 대한 통제 정책을 취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함.
 - 인공지능의 노동대체에 대한 통제/조절 정책을 선호하는 응답이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고르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통제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50대', '자영업', 이념성향 '보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인공지능의 노동 대체 시, 노동 정책 방향

(n=1,500,%)



※ 정책미래에 대한 설명문은 부록1. 설문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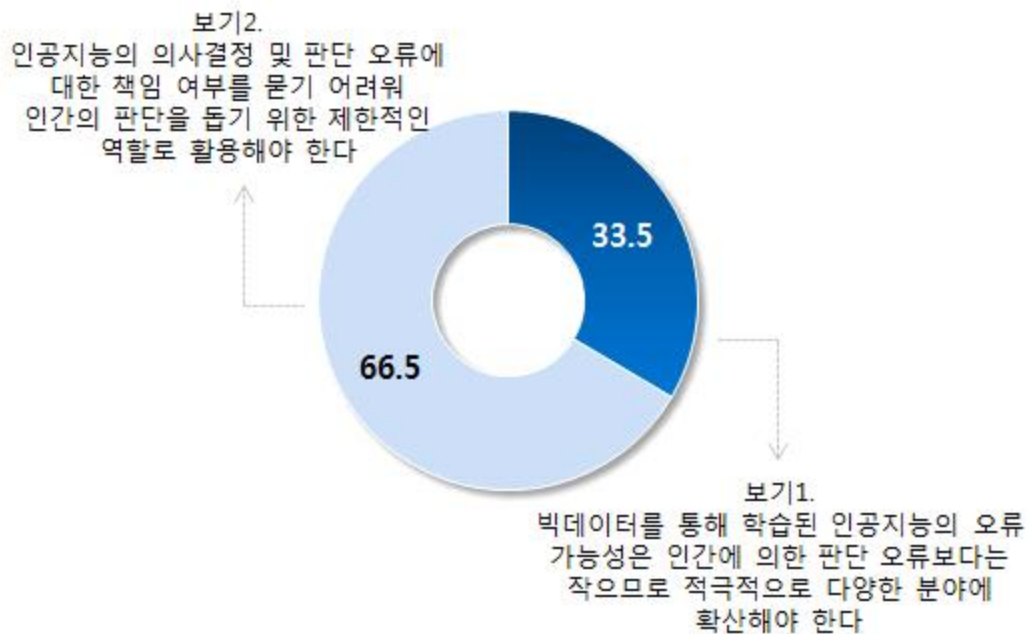
노동 정책 (%)		사례수	인공지능의 인간 노동 대체에 대한 통제 정책을 취할 필요가 없다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와 범위를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조절·통제하는 정책 취하여야
전체		(1500)	35.8	64.2
연령별	15세~18세	(87)	23.0	77.0
	19세~29세	(295)	35.6	64.4
	30대	(285)	35.5	64.5
	40대	(340)	32.1	67.9
	50대	(336)	42.5	57.5
	60세~65세	(157)	37.2	62.8
이념 성향별	진보	(474)	36.2	63.8
	중도	(775)	33.5	66.5
	보수	(251)	42.0	58.0
성별	남자	(764)	39.9	60.1
	여자	(736)	31.5	68.5
직업별	화이트칼라	(679)	34.2	65.8
	블루칼라	(221)	40.7	59.3
	자영업	(99)	46.2	53.8
	주부	(177)	32.7	67.3
	학생	(194)	31.1	68.9
	무직, 기타	(130)	38.7	61.3
기후	긍정 변화예상	(183)	42.5	57.5
	부정 변화예상	(1317)	34.8	65.2
에너지, 자원	긍정 변화예상	(565)	39.5	60.5
	부정 변화예상	(935)	33.5	66.5
식량, 수자원	긍정 변화예상	(421)	40.7	59.3
	부정 변화예상	(1079)	33.9	66.1
국제 정치	긍정 변화예상	(677)	37.3	62.7
	부정 변화예상	(823)	34.5	65.5
북한	긍정 변화예상	(1107)	35.3	64.7
	부정 변화예상	(393)	37.2	62.8
과학 기술	긍정 변화예상	(1321)	35.8	64.2
	부정 변화예상	(179)	35.5	64.5
경제	긍정 변화예상	(666)	38.9	61.1
	부정 변화예상	(834)	33.3	66.7
거주 환경	긍정 변화예상	(854)	37.7	62.3
	부정 변화예상	(646)	33.3	66.7
인구, 사회	긍정 변화예상	(432)	40.7	59.3
	부정 변화예상	(1068)	33.8	66.2
정치, 행정	긍정 변화예상	(631)	40.4	59.6
	부정 변화예상	(869)	32.4	67.6
사람	긍정 변화예상	(459)	41.4	58.6
	부정 변화예상	(1041)	33.3	66.7

11.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

-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및 판단 오류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묻기 어려워 인간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제한적인 역할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6.5%로, '빅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인공지능의 오류가능성은 인간에 의한 판단 오류보다는 작으므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33.5%) 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남.
 - 인공지능의 적극적 활용/확산을 선호하는 응답은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다수의 응답자가 인공지능의 제한적 역할 활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혜택, 편익 보다는 관련 부작용(오류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보임.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책 방향

(n=1,500,%)



※ 정책미래에 대한 설명문은 부록1. 설문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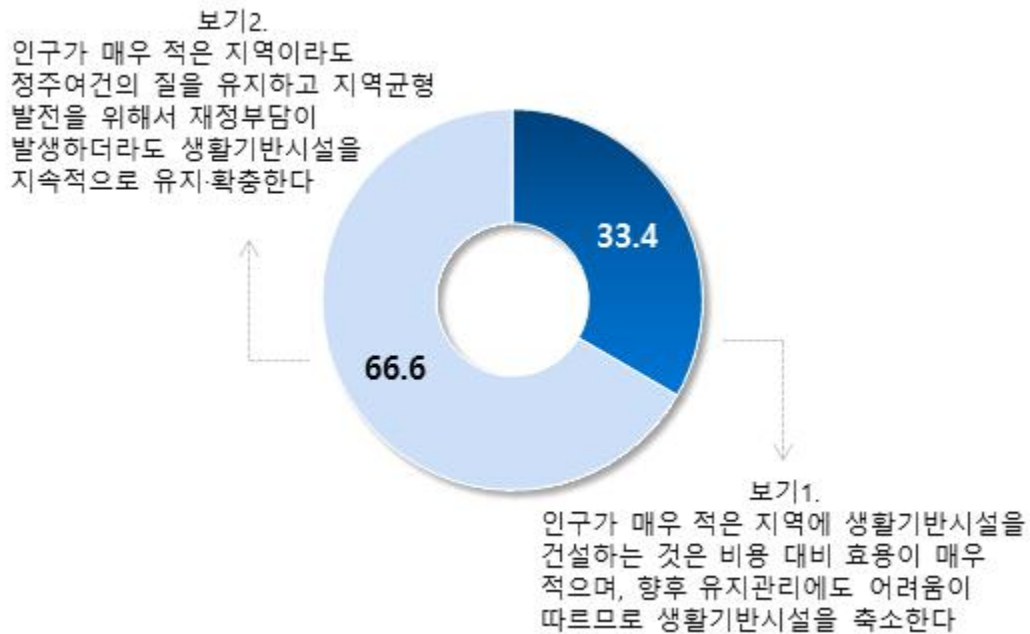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 (%)		사례수	빅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인공지능의 오류가능성은 인간에 의한 판단 오류보다는 작으므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확산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및 판단 오류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묻기 어려워 인간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제한적인 역할로 활용
전체		(1500)	33.5	66.5
연령별	15세~18세	(87)	31.5	68.5
	19세~29세	(295)	35.6	64.4
	30대	(285)	30.1	69.9
	40대	(340)	29.6	70.4
	50대	(336)	36.1	63.9
	60세~65세	(157)	40.1	59.9
이념 성향별	진보	(481)	35.0	65.0
	중도	(782)	32.9	67.1
	보수	(237)	32.5	67.5
성별	남자	(764)	37.3	62.7
	여자	(736)	29.5	70.5
기후	긍정 변화예상	(206)	42.0	58.0
	부정 변화예상	(1294)	32.2	67.8
에너지, 자원	긍정 변화예상	(569)	35.2	64.8
	부정 변화예상	(931)	32.5	67.5
식량, 수자원	긍정 변화예상	(411)	39.0	61.0
	부정 변화예상	(1089)	31.4	68.6
국제 정치	긍정 변화예상	(672)	33.0	67.0
	부정 변화예상	(828)	33.9	66.1
북한	긍정 변화예상	(1145)	32.6	67.4
	부정 변화예상	(355)	36.4	63.6
과학 기술	긍정 변화예상	(1350)	32.9	67.1
	부정 변화예상	(150)	38.7	61.3
경제	긍정 변화예상	(687)	35.0	65.0
	부정 변화예상	(813)	32.3	67.7
거주 환경	긍정 변화예상	(863)	34.1	65.9
	부정 변화예상	(637)	32.7	67.3
인구, 사회	긍정 변화예상	(455)	38.2	61.8
	부정 변화예상	(1045)	31.5	68.5
정치, 행정	긍정 변화예상	(635)	35.6	64.4
	부정 변화예상	(865)	32.0	68.0
사람	긍정 변화예상	(472)	38.7	61.3
	부정 변화예상	(1028)	31.2	68.8

12. 인프라 정책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생활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인구가 매우 적은 지역이라도 정주여건의 질을 유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정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생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확충해야한다'는 응답이 66.6%로 높았음.
- 그러나, 3명 중 1명(33.4%)은 '인구가 매우 적은 지역에 생활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용이 매우 적으며, 향후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르므로 생활기반시설을 축소'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확충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응답이 전 세대와 계층에서 높은 가운데,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이념성향 '진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기반시설 관리 정책 방향

(n=1,500,%)



※ 정책미래에 대한 설명문은 부록1. 설문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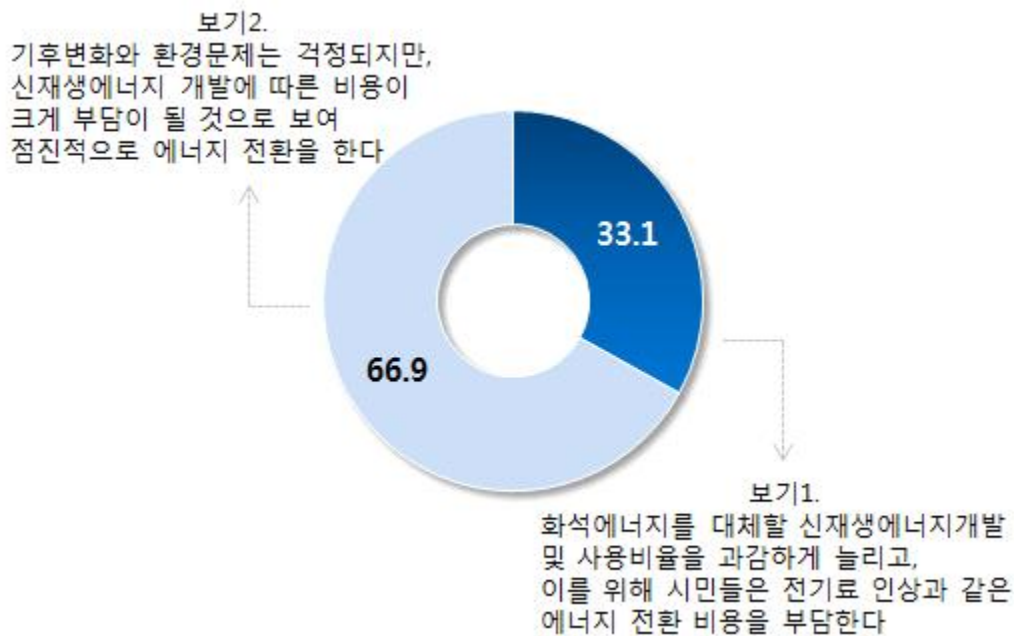
인프라 정책 (%)		사례수	인구가 적은 지역에 생활기반시설 건설은 비용 대비 효용이 적고, 향후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르므로 생활기반시설 축소	인구가 적은 지역도 정주여건의 질 유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재정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생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확충
전체		(1500)	33.4	66.6
연령별	15세~18세	(87)	36.7	63.3
	19세~29세	(295)	32.2	67.8
	30대	(285)	34.3	65.7
	40대	(340)	30.1	69.9
	50대	(336)	36.6	63.4
	60세~65세	(157)	32.2	67.8
이념 성향별	진보	(474)	28.7	71.3
	중도	(775)	35.3	64.7
	보수	(251)	36.4	63.6
지역별	서울	(294)	37.0	63.0
	경기/인천	(469)	35.9	64.1
	대전/세종/충청	(154)	33.0	67.0
	광주/전라	(144)	25.4	74.6
	대구/경북	(146)	35.5	64.5
	부산/울산/경남	(230)	26.6	73.4
	강원/제주	(63)	36.9	63.1
기후	긍정 변화예상	(183)	37.0	63.0
	부정 변화예상	(1317)	32.9	67.1
에너지, 자원	긍정 변화예상	(565)	31.6	68.4
	부정 변화예상	(935)	34.4	65.6
식량, 수자원	긍정 변화예상	(421)	33.8	66.2
	부정 변화예상	(1079)	33.2	66.8
국제 정치	긍정 변화예상	(677)	31.2	68.8
	부정 변화예상	(823)	35.2	64.8
북한	긍정 변화예상	(1107)	31.4	68.6
	부정 변화예상	(393)	39.1	60.9
과학 기술	긍정 변화예상	(1321)	32.0	68.0
	부정 변화예상	(179)	43.5	56.5
경제	긍정 변화예상	(666)	31.4	68.6
	부정 변화예상	(834)	34.9	65.1
거주 환경	긍정 변화예상	(854)	32.0	68.0
	부정 변화예상	(646)	35.2	64.8
인구, 사회	긍정 변화예상	(432)	32.6	67.4
	부정 변화예상	(1068)	33.7	66.3
정치, 행정	긍정 변화예상	(631)	32.5	67.5
	부정 변화예상	(869)	34.0	66.0
사람	긍정 변화예상	(459)	32.9	67.1
	부정 변화예상	(1041)	33.6	66.4

13. 기후와 에너지 정책

- 한반도 기온 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기후 변화와 환경문제는 걱정되지만,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비용이 크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점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응답이 66.9%로 높게 나타남.
- 한편, 3명 중 1명 정도(33.1%)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사용비용을 과감하게 늘리고, 이를 위해 시민들은 전기료 인상과 같은 에너지 전환 비용을 부담'하는 정책을 선호함.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전환 비용 부담을 선호하는 응답은 이념성향 '진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점진적 에너지 전환을 선호하는 응답은 이념성향 '보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대부분의 응답자가 점진적 에너지 전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후, 에너지/자원, 식량, 수자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를 위한 비용부담에는 소극적임.

한반도 기온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

(n=1,500,%)



※ 정책미래에 대한 설명문은 부록1. 설문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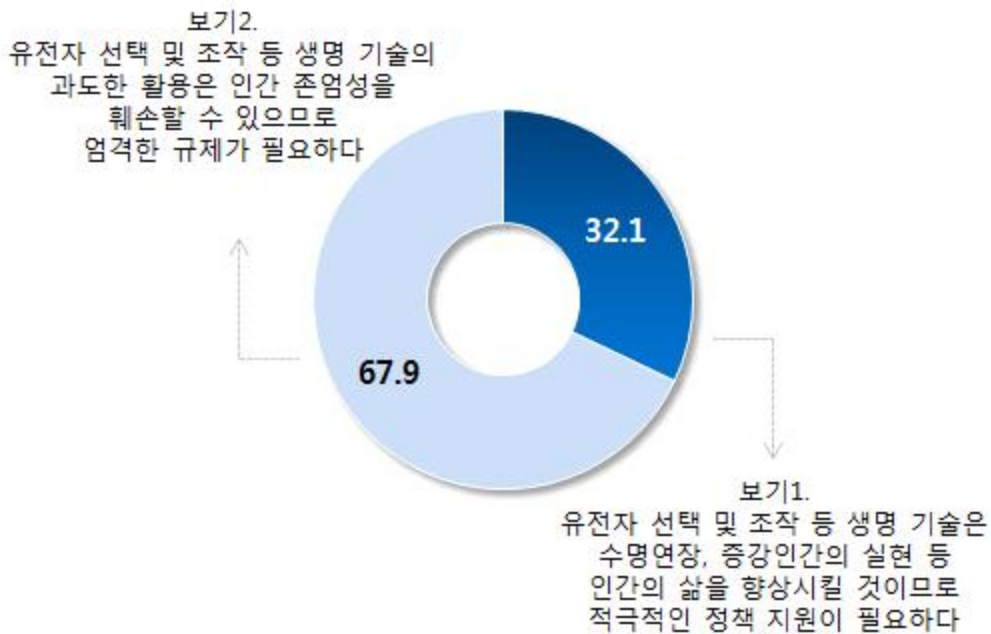
기후와 에너지 정책 방향 (%)		사례수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사용비율을 과감하게 늘리고, 이를 위해 시민들은 전기료 인상과 같은 에너지 전환 비용을 부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걱정되지만,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비용이 크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점진적으로 에너지 전환
전체		(1500)	33.1	66.9
연령별	15세~18세	(87)	35.1	64.9
	19세~29세	(295)	28.2	71.8
	30대	(285)	33.6	66.4
	40대	(340)	37.4	62.6
	50대	(336)	34.1	65.9
	60세~65세	(157)	28.7	71.3
이념 성향별	진보	(481)	40.2	59.8
	중도	(782)	31.0	69.0
	보수	(237)	25.5	74.5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173)	31.4	68.6
	200~400만원미만	(481)	30.1	69.9
	400~600만원미만	(446)	34.5	65.5
	600~800만원미만	(224)	34.7	65.3
	800만원 이상	(176)	37.0	63.0
기후	긍정 변화예상	(206)	35.7	64.3
	부정 변화예상	(1294)	32.7	67.3
에너지, 자원	긍정 변화예상	(569)	36.6	63.4
	부정 변화예상	(931)	30.9	69.1
식량, 수자원	긍정 변화예상	(411)	34.3	65.7
	부정 변화예상	(1089)	32.6	67.4
국제 정치	긍정 변화예상	(672)	35.5	64.5
	부정 변화예상	(828)	31.1	68.9
북한	긍정 변화예상	(1145)	34.3	65.7
	부정 변화예상	(355)	29.2	70.8
과학 기술	긍정 변화예상	(1350)	32.9	67.1
	부정 변화예상	(150)	34.3	65.7
경제	긍정 변화예상	(687)	36.6	63.4
	부정 변화예상	(813)	30.1	69.9
거주 환경	긍정 변화예상	(863)	32.3	67.7
	부정 변화예상	(637)	34.1	65.9
인구, 사회	긍정 변화예상	(455)	33.0	67.0
	부정 변화예상	(1045)	33.1	66.9
정치, 행정	긍정 변화예상	(635)	37.9	62.1
	부정 변화예상	(865)	29.5	70.5
사람	긍정 변화예상	(472)	34.4	65.6
	부정 변화예상	(1028)	32.5	67.5

14. 인간 존엄과 생명 기술

- 바이오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간의 존엄/가치를 대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유전자 선택 및 조작 등 생명 기술의 과도한 활용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7.9%로 '유전자 선택 및 조작 등 생명 기술은 수명연장, 증강인간의 실현 등 인간의 삶을 향상시킬 것이므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32.1%) 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생명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0대', '남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대하는 정책 방향

(n=1,500,%)



※ 정책미래에 대한 설명문은 부록1. 설문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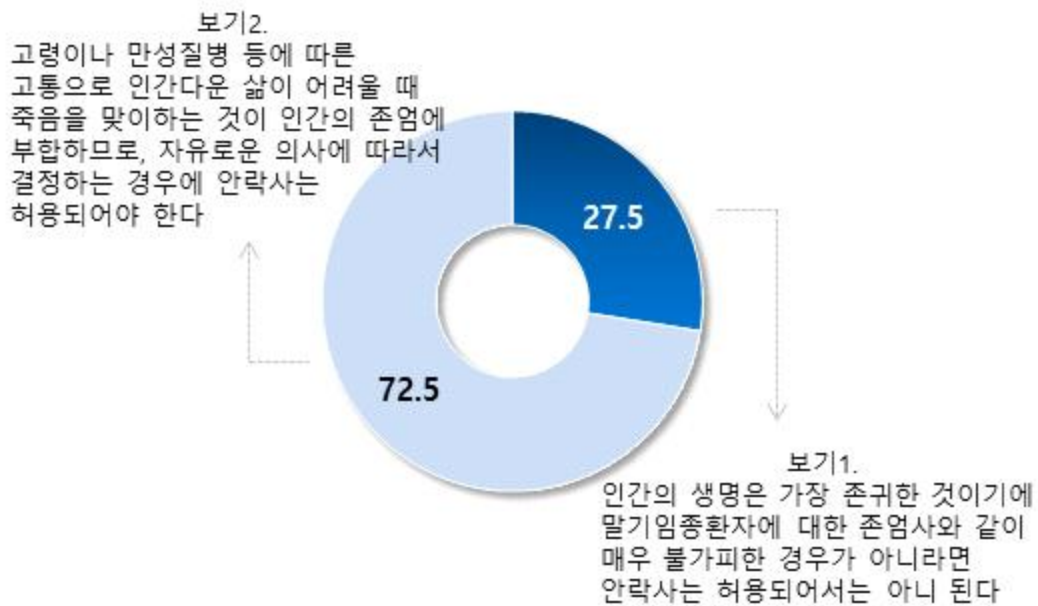
인간의 존엄과 생명기술 (%)		사례수	생명 기술은 수명연장, 증강인간의 실현 등 인간의 삶을 향상시킬 것이므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	유전자 선택 및 조작 등 생명 기술의 과도한 활용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
전체		(1500)	32.1	67.9
연령별	15세~18세	(87)	36.7	63.3
	19세~29세	(295)	39.6	60.4
	30대	(285)	30.6	69.4
	40대	(340)	29.9	70.1
	50대	(336)	28.8	71.2
	60세~65세	(157)	30.1	69.9
이념 성향별	진보	(474)	32.2	67.8
	중도	(775)	31.0	69.0
	보수	(251)	35.2	64.8
성별	남자	(764)	40.4	59.6
	여자	(736)	23.5	76.5
자녀 연령대	자녀 없음	(705)	33.3	66.7
	미취학	(148)	34.5	65.5
	초/중/고 재학중	(300)	27.9	72.1
	20대 이상 성인	(445)	30.2	69.8
기후	긍정 변화예상	(183)	41.2	58.8
	부정 변화예상	(1317)	30.8	69.2
에너지, 자원	긍정 변화예상	(565)	33.6	66.4
	부정 변화예상	(935)	31.2	68.8
식량, 수자원	긍정 변화예상	(421)	36.6	63.4
	부정 변화예상	(1079)	30.4	69.6
국제 정치	긍정 변화예상	(677)	33.3	66.7
	부정 변화예상	(823)	31.1	68.9
북한	긍정 변화예상	(1107)	31.5	68.5
	부정 변화예상	(393)	33.8	66.2
과학 기술	긍정 변화예상	(1321)	31.9	68.1
	부정 변화예상	(179)	33.4	66.6
경제	긍정 변화예상	(666)	32.9	67.1
	부정 변화예상	(834)	31.5	68.5
거주 환경	긍정 변화예상	(854)	32.8	67.2
	부정 변화예상	(646)	31.2	68.8
인구, 사회	긍정 변화예상	(432)	34.1	65.9
	부정 변화예상	(1068)	31.3	68.7
정치, 행정	긍정 변화예상	(631)	33.2	66.8
	부정 변화예상	(869)	31.3	68.7
사람	긍정 변화예상	(459)	35.3	64.7
	부정 변화예상	(1041)	30.7	69.3

15. 안락사

- 인간 수명이 100세 이상으로 연장되는 시대가 올 때, 안락사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72.5%)이 '고령이나 만성질병 등에 따른 고통으로 인간다운 삶이 어려울 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에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안락사 허용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4명 중 1명 이상(27.5%)은 '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귀한 것이기에 말기임종환자에 대한 존엄사와 같이 매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락사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 안락사 허용에 부정적임.

안락사 관련 정책 방향

(n=1,500,%)



※ 정책미래에 대한 설명문은 부록1. 설문지 참고

안락사 (%)		사례수	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귀한 것, 말기임종환자 존엄사와 같이 매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락사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고통으로 인간다운 삶이 어려울 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에 부합,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른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전체		(1500)	27.5	72.5
연령별	15세~18세	(87)	23.4	76.6
	19세~29세	(295)	24.9	75.1
	30대	(285)	32.8	67.2
	40대	(340)	29.8	70.2
	50대	(336)	24.3	75.7
	60세~65세	(157)	27.2	72.8
이념 성향별	진보	(474)	23.7	76.3
	중도	(775)	28.6	71.4
	보수	(251)	31.6	68.4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168)	33.5	66.5
	200~400만원미만	(504)	27.5	72.5
	400~600만원미만	(450)	26.9	73.1
	600~800만원미만	(208)	25.3	74.7
	800만원 이상	(171)	26.2	73.8
기후	긍정 변화예상	(183)	39.4	60.6
	부정 변화예상	(1317)	25.9	74.1
에너지, 자원	긍정 변화예상	(565)	30.3	69.7
	부정 변화예상	(935)	25.9	74.1
식량, 수자원	긍정 변화예상	(421)	31.2	68.8
	부정 변화예상	(1079)	26.1	73.9
국제 정치	긍정 변화예상	(677)	26.6	73.4
	부정 변화예상	(823)	28.3	71.7
북한	긍정 변화예상	(1107)	26.3	73.7
	부정 변화예상	(393)	31.0	69.0
과학 기술	긍정 변화예상	(1321)	27.1	72.9
	부정 변화예상	(179)	31.0	69.0
경제	긍정 변화예상	(666)	28.4	71.6
	부정 변화예상	(834)	26.8	73.2
거주 환경	긍정 변화예상	(854)	27.0	73.0
	부정 변화예상	(646)	28.2	71.8
인구, 사회	긍정 변화예상	(432)	31.4	68.6
	부정 변화예상	(1068)	26.0	74.0
정치, 행정	긍정 변화예상	(631)	27.9	72.1
	부정 변화예상	(869)	27.3	72.7
사람	긍정 변화예상	(459)	30.6	69.4
	부정 변화예상	(1041)	26.2	73.8

16. 식량자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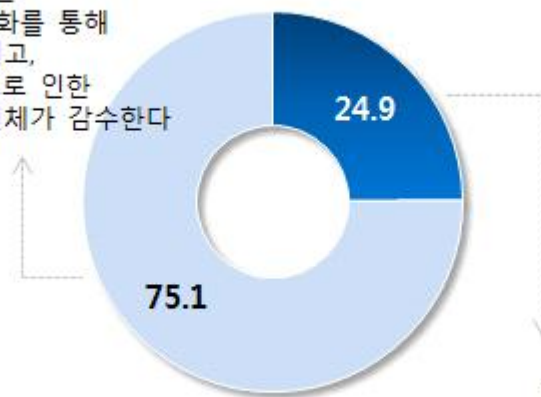
- 원활한 식량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75.1%가 'GMO작물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배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안 되며, 대신 농업에 대한 대대적 기술투자와 기업화를 통해 생산성을 어느 정도 높이고, 나머지 식량 부족 상황으로 인한 식량가격 상승은 국민 전체가 감수'하는 정책을 선택해, 응답자 대부분이 유전자편집기술을 활용한 식량자원 정책에 부정적임.
- 한편, 4명 중 1명 가량(24.9%)은 '유전자편집기술을 활용한 GMO작물이 안전성을 검증 받지 않았지만, 생산력·경제성·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GMO작물 재배수입을 허용'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GMO 작물 재배 수입 허용 응답은 '10대 및 20대', '학생',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30년 후 '식량, 수자원' 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응답자가 GMO 작물의 재배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감수해야한다고 보고 있음.

원활한 식량 수급을 위한 정책 방향

(n=1,500,%)

보기2.

GMO작물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배·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안 되며, 대신 농업에 대한 대대적 기술투자와 기업화를 통해 생산성을 어느 정도 높이고, 나머지 식량 부족 상황으로 인한 식량가격 상승은 국민 전체가 감수한다



보기1.

유전자편집기술을 활용한 GMO작물이 안전성을 검증 받지 않았지만, 생산력·경제성·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GMO작물 재배·수입을 허용한다

※ 정책미래에 대한 설명문은 부록1. 설문지 참고

식량자원 정책 (%)		사례수	유전자편집기술을 활용한 GMO 작물이 안전성을 검증 받지 않았지만, 생산력·경제성·품질이 뛰어나므로 GMO작물 재배수입을 허용	GMO작물의 재배수입 허용은 안 되며, 농업에 대한 기술투자, 기업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식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국민이 감수
전체		(1500)	24.9	75.1
연령별	15세~18세	(87)	43.0	57.0
	19세~29세	(295)	35.5	64.5
	30대	(285)	22.2	77.8
	40대	(340)	17.0	83.0
	50대	(336)	22.7	77.3
	60세~65세	(157)	21.2	78.8
이념 성향별	진보	(481)	22.0	78.0
	중도	(782)	27.6	72.4
	보수	(237)	21.7	78.3
성별	남자	(764)	30.2	69.8
	여자	(736)	19.3	80.7
직업별	화이트칼라	(696)	23.4	76.6
	블루칼라	(206)	30.0	70.0
	자영업	(102)	21.9	78.1
	주부	(189)	14.1	85.9
	학생	(196)	36.9	63.1
	무직, 기타	(112)	24.5	75.5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173)	32.1	67.9
	200~400만원미만	(481)	23.3	76.7
	400~600만원미만	(446)	25.2	74.8
	600~800만원미만	(224)	22.3	77.7
	800만원 이상	(176)	24.4	75.6
결혼 여부	기혼	(795)	21.1	78.9
	미혼	(650)	29.2	70.8
	기타	(55)	28.0	72.0
자녀 연령대	자녀 없음	(696)	28.0	72.0
	미취학	(148)	23.4	76.6
	초/중/고 재학 중	(307)	22.1	77.9
	20대 이상 성인	(450)	22.2	77.8

- 계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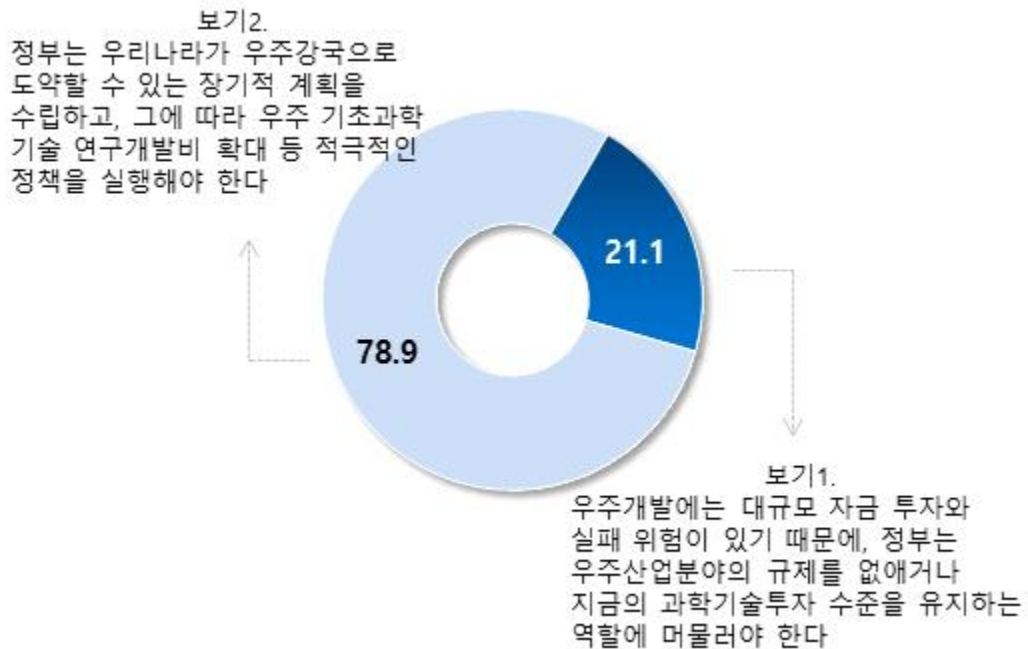
식량자원 정책 (%)		사례수	유전자편집기술을 활용한 GMO 작물이 안전성을 검증 받지 않았지만, 생산력·경제성·품질이 뛰어나므로 GMO작물 재배수입을 허용	GMO작물의 재배수입 허용은 안 되며, 농업에 대한 기술투자, 기업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식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국민이 감수
전체		(1500)	24.9	75.1
기후	긍정 변화예상	(206)	30.3	69.7
	부정 변화예상	(1294)	24.0	76.0
에너지, 자원	긍정 변화예상	(569)	26.9	73.1
	부정 변화예상	(931)	23.6	76.4
식량, 수자원	긍정 변화예상	(411)	29.2	70.8
	부정 변화예상	(1089)	23.2	76.8
국제 정치	긍정 변화예상	(672)	24.6	75.4
	부정 변화예상	(828)	25.1	74.9
북한	긍정 변화예상	(1145)	22.7	77.3
	부정 변화예상	(355)	31.7	68.3
과학 기술	긍정 변화예상	(1350)	23.9	76.1
	부정 변화예상	(150)	33.2	66.8
경제	긍정 변화예상	(687)	23.3	76.7
	부정 변화예상	(813)	26.2	73.8
거주 환경	긍정 변화예상	(863)	25.9	74.1
	부정 변화예상	(637)	23.4	76.6
인구, 사회	긍정 변화예상	(455)	27.7	72.3
	부정 변화예상	(1045)	23.7	76.3
정치, 행정	긍정 변화예상	(635)	23.3	76.7
	부정 변화예상	(865)	26.0	74.0
사람	긍정 변화예상	(472)	26.1	73.9
	부정 변화예상	(1028)	24.3	75.7

17. 우주 개발

- 우주개발 관점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우주 기초과학기술 연구개발비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가량(78.9%)으로 지배적임.
- 한편, 5명 중 1명가량(21.1%)은 '우주개발에는 대규모 자금 투자와 실패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우주산업분야의 규제를 없애거나 지금의 과학기술투자 수준을 유지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응답함.
- 30년 후 과학기술 변화에 대해 긍정적 전망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가운데, 우주개발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주개발에 대한 정책 방향

(n=1,500,%)



※ 정책미래에 대한 설명문은 부록1. 설문지 참고

우주 개발 (%)		사례수	대규모 자금 투자와 실패 위험, 정부는 우주산업분야의 규제를 없애거나 지금의 과학기술투자 수준을 유지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 그에 따라 우주 기초과학기술 연구개발비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실행
전체		(1500)	21.1	78.9
연령별	15세~18세	(87)	31.8	68.2
	19세~29세	(295)	23.4	76.6
	30대	(285)	20.8	79.2
	40대	(340)	20.8	79.2
	50대	(336)	18.6	81.4
	60세~65세	(157)	17.1	82.9
이념 성향별	진보	(474)	19.8	80.2
	중도	(775)	21.5	78.5
	보수	(251)	22.1	77.9
학력별	국졸/중졸 이하	(54)	33.3	66.7
	고졸이하	(298)	26.3	73.7
	대졸이하	(990)	18.9	81.1
	대학원졸이하	(158)	20.6	79.4
기후	긍정 변화예상	(183)	25.1	74.9
	부정 변화예상	(1317)	20.5	79.5
에너지, 자원	긍정 변화예상	(565)	20.4	79.6
	부정 변화예상	(935)	21.5	78.5
식량, 수자원	긍정 변화예상	(421)	22.1	77.9
	부정 변화예상	(1079)	20.6	79.4
국제 정치	긍정 변화예상	(677)	17.5	82.5
	부정 변화예상	(823)	24.0	76.0
북한	긍정 변화예상	(1107)	19.2	80.8
	부정 변화예상	(393)	26.3	73.7
과학 기술	긍정 변화예상	(1321)	19.1	80.9
	부정 변화예상	(179)	35.6	64.4
경제	긍정 변화예상	(666)	16.4	83.6
	부정 변화예상	(834)	24.8	75.2
거주 환경	긍정 변화예상	(854)	19.2	80.8
	부정 변화예상	(646)	23.6	76.4
인구, 사회	긍정 변화예상	(432)	20.0	80.0
	부정 변화예상	(1068)	21.5	78.5
정치, 행정	긍정 변화예상	(631)	18.4	81.6
	부정 변화예상	(869)	23.0	77.0
사람	긍정 변화예상	(459)	20.8	79.2
	부정 변화예상	(1041)	21.2	78.8

Ⅲ 요약 및 결론

- **과거 대비 현재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앞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과거 대비 현재의 변화는 '경험', 미래의 변화는 막연한 '예측'임에도 큰 변화를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에는 전 세대/계층 동의하고 있음

- **일반국민들이 예상하는 30년 후 미래의 모습은 대체로 "암울"**
 : 11개 분야별 미래 전망 중 '기후', '식량/수자원', '인구/사회' 등 총 8개 분야에서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이 절반 이상임. 그러나 과학기술, 북한, 거주환경에 대해서만 미래 변화를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음
 → 기술은 항상 발전하고, 남북은 언젠가는 통일할 것이라는 인식 바탕

- **기후, 식량/수자원, 인구/사회, 사람, 에너지/자원에 대해서는 60% 이상, 정치/행정, 국제정치, 경제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부정 전망**
 :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기상이변 등 자연환경과 관련한 부정적 전망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확실한 위험 요인인 만큼 지금부터 정책을 준비해서 국민의견을 수렴해야하는 분야로 보임
 : 주요 국가들의 가장 큰 사회문제인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사회 및 사람(human, 인간관계)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전망이 높고, 당연히 이와 관련된 사회경제 시스템,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	과학기술	북한	거주 환경	경제	국제 정치	정치, 행정	에너지, 자원	사람	인구, 사회	식량, 수자원	기후
긍정 전망	89.1	75.1	57.2	45.0	44.8	42.0	37.7	30.9	29.4	27.6	13.0
부정 전망	10.9	24.9	42.8	55.0	55.2	58.0	62.3	69.1	70.6	72.4	87.0

- : 11개 분야별 미래의 변화 모습 전망(긍정적으로 변화할 것,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전체 결과와 차이가 나타나는 분야를 살펴보면, "성별"로 차이가 있는 분야는 '기후'였으며 "세대별(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분야는 '기후', '에너지/자원', '식량/수자원', '국제 정치', '북한', '경제', '정치행정', '인간관계'임. "지역별"로 미래 변화 모습 전망에 차이가 있는 분야는 '에너지/자원', '북한'이었

으며, "직업별"로는 '기후', '식량/수자원', '국제정치', '북한', '경제', '정치행정'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구 월소득 수준별"로 차이가 있는 분야는 '기후', '에너지/자원', '북한'이고, "학력별"로 차이가 있는 분야는 '에너지/자원', '식량/수자원', '인간관계'로 나타남. "결혼 여부"에 따라 미래 전망에 차이가 있는 분야는 '기후', '국제정치', '북한', '경제', '정치행정'이고, "자녀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나는 분야는 '기후', '식량/수자원', '국제정치', '북한', '경제', '거주환경', '정치행정', '인간관계'였음. "정치성향별"로 미래 전망에 차이가 있는 분야는 '국제정치', '북한', '과학기술', '경제', '정치행정'으로 나타났음.

○ 기술의 발전, 환경과 관련된 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비교적 뚜렷한 선호 형성
그 외 정치/사회/경제 시스템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지속적 정책 보완을 통한 국민 의견 수렴 필요

이민정책	노동이민은 가능한 억제	49.0%	VS	이민 정책 확대	51.0%
환경정책	플라스틱 제품 소비 규제	53.6%	VS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신기술 투자 확대	46.4%
외교안보정책	한-중 우호, 한-미동맹 강화	46.3%	VS	미-중 사이에 중재자/균형자	53.7%
부동산 정책	토지공개념 제한적 적용	45.5%	VS	토지공개념 대폭 강화	54.5%
복지정책방향	선별복지로 국가 재정부담 완화	54.7%	VS	국민 전체 대상 보편복지 실현	45.3%
지방분권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불필요	56.3%	VS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추진	43.7%
가족 제도	현재의 가족형태만 인정	40.1%	VS	생활공동체도 가족으로 인정	59.9%
빅데이터의 활용	빅데이터 악용 가능성 차단	61.7%	VS	빅데이터 적극 활용	38.3%
정치 갈등	사회적·문화적 동질성 유지 정책	37.4%	VS	다원성,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책 추진	62.6%
인공지능 노동정책방향	인공지능 개발 통제 정책 불필요	35.8%	VS	인공지능 조절·통제하는 정책	64.2%
인공지능 의사결정	인공지능 제한적 활용	66.5%	VS	인공지능 적극 확산	33.5%
인프라 정책	생활기반시설 유지·확충	66.6%	VS	인구 적은 지역, 생활기반시설 축소	33.4%
기후와 에너지 정책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	66.9%	VS	과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33.1%
인간 존엄과 생명기술	생명 기술 엄격한 규제	67.9%	VS	생명 기술 적극적 정책 지원	32.1%
안락사	안락사 허용 반대	27.5%	VS	안락사 허용 찬성	72.5%
식량자원정책	GMO작물 재배·수입 제한	75.1%	VS	GMO작물 재배·수입 허용	24.9%
우주 개발	우주개발 소극적 투자	21.1%	VS	우주개발 적극적 투자	78.9%

- : 17개 미래정책 중, 응답자의 60% 이상이 선택해 비교적 정책 선호도가 뚜렷하게 확인된 정책은 '우주개발', '식량자원정책', '안락사', '인간존엄과 생명기술', '기후와 에너지 정책', '인공지능 의사결정', '인공지능 노동정책 방향' 등 총 9개이며, '정치갈등', '빅데이터의 활용', '가족제도', '지방분권' 정책은 조금 더 선호하는 정책은 있으나, 60% 이상의 지지는 얻지 못한 상태로 사회적 공론화 등을 통해 정책 선호를 지속적으로 확인/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 한편, '복지정책 방향', '부동산 정책', '외교안보 정책', '환경정책', '이민정책'은 정책 선호도가 비슷하게 높게(40~50%) 나타나는 등 정책 방향 수립/추진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 및 공론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응답자 특성별로 정책 선호도의 차이가 뚜렷한 분야는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사회 갈등 유발 가능성 높아, 지속적 여론 확인 및 단계적 정책 추진 필요**

- : 예상되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17개 정책)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자 특성별로 전체 결과와 차이가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성별"로 차이가 있는 정책은 '빅데이터의 활용', '식량자원 정책', '환경정책', '인간존엄과 생명기술', '노동정책 방향'이었으며 "세대별(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정책은 '식량자원 정책', '외교안보정책(한중미일관계)', '가족제도', '환경정책', '인간존엄과 생명기술', '우주개발', '복지정책 방향', '노동정책 방향', '정치 갈등'이었음.
- "지역별"로 미래 정책 선호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정책은 '부동산 정책', '인프라 정책'이었으며, "직업별"로 차이가 있는 정책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 '식량자원 정책', '가족제도', '환경정책', '인간존엄과 생명기술', '노동정책 방향', '안락사'로 나타남.
- "가구 월소득 수준별"로 선호도 차이가 있는 정책은 '지방분권'이고, "학력별"로 차이가 있는 정책은 '식량자원 정책', '노동정책 방향', '이민정책', '정치 갈등'이었음.
- "결혼여부" 별로는 '식량자원 정책', '가족제도', '환경정책'에서, "자녀 연령대별"로는 '외교안보 정책(한중미일관계)', '가족제도', '환경정책'에서 정책 선호도에 차이가 있었음.
- "정치성향별"로는 '기후와 에너지 정책', '외교안보 정책(한중미일관계)', '부동산 정책', '가족제도', '복지정책 방향', '정치 갈등' 관련 미래정책에 있어 선호도의 차이가 나타남.

- 17개의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책에 있어서 ① 다양성·포용성(가족제도, 정치갈등, 지역인프라, 안락사), ② 과학기술의 남용 규제(인공지능, 생명기술, 식량자원), ③ 정책의 점진적·단계적 추진(복지정책, 지방분권, 에너지)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 『사람(Human)(종교, 건강, 정신건강(우울증, 스트레스, 자살 등), 심리, 가치관, 여가 등)』과 『인구·사회(인구구조, 출생, 가족, 고령화, 교육, 문화, 계층이동, 외국인유입 등)』에 관한 미래 전망이 『경제』나 『정치』보다 훨씬 부정적임
 - : 특히 20대, 30대, 40대의 부정적인 전망은 다른 세대보다 강함
 - : 이들 분야에 대한 강한 부정적 전망은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대비됨
 - : 사람과 인구·사회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의 적극적 활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음
- 우리 삶의 모습 변화에 대해서 “블루칼라”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변화를 적게 느끼고 있음(5년전, 10년전, 20년전, 30년전 과거 대비 모두의 경우)
 - : 블루칼라계층의 생활 속에서 다른 직종들에 비해 과거와의 변화를 덜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정치갈등과 이민에 관한 정책선호도 결과를 해석해보면, 사회적 다원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긍정하고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찬성이 62.6%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나 이민정책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통합성에 대한 찬성은 이보다 적은 51%로 나타남
 - : 다양성, 포용성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민정책에 있어서는 보다 정교하고, 조심스럽게 정책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음
- 국민은 과학기술, 북한, 거주환경 빼고 모두 부정적으로 미래 전망
 - : 경제와 국제정치는 세대별 전망이 엇갈림
 - : 기후와 환경의 미래는 세대별 모두 `부정적` 전망
- 노동력 부족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은 선호도가 침체하게 엇갈림
 - : 20대(노동이민 억제)와 50대(노동이민 포용)의 의견이 가장 심각한 차이를 보임
- 우주개발은 세대를 불문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선호
- 외교안보와 지방분권화에 대한 정책에서 20대와 60대의 의견이 같음
 - : 외교안보 정책에서 20대와 60대는 한미일 동맹 강화를, 지방분권화 정책에서 20대와 60대는 다른 세대와 달리 중앙집중을 선호

- **가족제도 정책의 경우 이념 성향 및 세대에 따라서 선호도가 첨예하게 엇갈림**
 - : 진보(다양한 가족 선호)와 보수(전통적 가족 선호)의 극명한 의견 차이
 - : 20대(다양한 가족)와 60대(전통 가족)가 세대별로 가장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임

- **인공지능의 노동대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우려를 표명**
 - : 경제와 인구/사회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국민일수록 인공지능이 노동을 대체하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을 선호함

- **인공지능의 신뢰도는 대부분 높지 않음**
 - :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국민은 인공지능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부록1

설문지

2050 미래 대비 정책수립을 위한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입니다.

저희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의뢰로 2050년 미래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여,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산하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조사 결과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남자
- 2) 여자

SQ2. 실례지만, 귀하의 나이는 올 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세

1) 만 15세 미만, 66세 이상 → 조사 중단

- 2) 15세~18세
- 3) 19세~ 29세
- 4) 30세~ 39세
- 5) 40세~ 49세
- 6) 50세~ 59세
- 7) 60세 ~65세

SQ3.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1) 서울특별시
- 2) 부산광역시
- 3) 대구광역시
- 4) 인천광역시
- 5) 광주광역시
- 6) 대전광역시
- 7) 울산광역시
- 8) 세종특별자치시
- 9) 경기도
- 10) 강원도
- 11) 충청북도
- 12) 충청남도
- 13) 전라북도
- 14) 전라남도
- 15) 경상북도
- 16) 경상남도
- 17) 제주도

국회미래연구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환경변수를 빅데이터 및 전문가 토론을 통해 최종 13대 분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아래 표 참고)

이를 활용하여 각 분야별로 시나리오를 통해 2050년의 미래 모습을 그리고, 위험한 미래로 갈 가능성을 낮추고, 국민이 선호하는 미래로 가기 위한 확률을 높이는 정책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한 장단점, 부작용, 대안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께 제공하여, 정책과제에 대한 선호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국회미래연구원 미래 환경변수 13대 분야]

미래 결정변수 분야	관련 키워드
① 기후변화	환경,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생물다양성, 탄소, 자연재해(홍수, 가뭄, 태풍, 지진 등), 환경오염(미세먼지,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등
② 과학기술	정보통신 인공지능(딥러닝, 신경망 네트워크, 인지기술 등), 초연결(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등), 스마트기술(자동차, 팜, 팩토리 등), 드론, 블록체인 등
	생명 암 치료, 맞춤형 치료, 바이오 정보, 유전자 기술, 뇌 전염병, 질병 등
	우주 우주물질, 우주생명, 우주물리, 인공위성, 우주선(線) 등
③ 에너지·자원	신재생(태양광, 풍력 등), 미래에너지, 전력시장(수요예측),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에너지연료(천연가스, 셰일가스, 석탄, 석유 등), 광물자원 등
④ 식량·수자원	물, 농업, 축산, 식품(식품안전, 곤충 등)
⑤ 국제정치	국제 관계, 국제 거버넌스, 국제 권력, 미-중, 북-미 등
⑥ 북한	안보, 통일, 전쟁, 비핵화, 경제협력, 인도적지원 등
⑦ 경제	산업, 시장, 빈부차, 임금, 기업, 4차산업혁명, 고용 등
⑧ 거주환경	지역, 교통, 도시, 주택, 부동산 등
⑨ 사람(Human)	종교, 건강, 정신건강(우울증, 스트레스, 자살 등), 심리, 가치관, 여가 등
⑩ 인구·사회	인구구조, 출생, 가족, 고령화, 교육, 문화, 계층이동, 외국인유입 등
⑪ 정치·행정	전자민주주의, 사회갈등(세대, 젠더 등), 사회통합, 권력구조, 시민정치참여, 이념성향 등

[prog : 7초 강제 제시]

미래에 대한 인식

AQ1. 선생님께서는 '과거'에 비해 우리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의 모습 전반의 변화가 크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과거 대비 현재 우리사회의 모습 평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음	<----->				과거와 완전히 달라짐	잘 모 름
		1	2	3	4		
5년 전 (2014년)	1	2	3	4	5		
10년 전 (2009년)	1	2	3	4	5		
20년 전 (1999년)	1	2	3	4	5	9	
30년 전 (1989년)	1	2	3	4	5	9	

AQ2. 선생님께서는 '미래'에 우리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의 모습 전반적으로 크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될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현재 대비 미래 우리사회의 모습 예상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				현재와 완전히 달라질 것
		1	2	3	4	
5년 후 (2024년)	1	2	3	4	5	
10년 후 (2029년)	1	2	3	4	5	
20년 후 (2039년)	1	2	3	4	5	
30년 이후 (2050년)	1	2	3	4	5	

AQ3. 선생님께서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하여 한국의 미래를 각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0년 후 변화 예상 (2050년)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
1) 기후	1	2
2) 에너지, 자원	1	2
3) 식량, 수자원	1	2
4) 국제 정치	1	2
5) 북한	1	2
6) 과학기술(정보통신, 생명, 우주)	1	2
7) 경제	1	2
8) 거주환경	1	2
9) 인구, 사회	1	2
10) 정치, 행정	1	2
11) 사람(human, 인간관계)	1	2

지금부터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변화>와 그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가” 타입 설문지]

기후와 에너지 정책

미래 변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석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50년까지 한반도 평균기온은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여름 일수가 길어지고 폭염과 열대야까지 증가해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이에 따라 우리사회 시민들은 대부분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이 설치된 실내에서 생활하며, 특히 남부지방은 노약자들이 폭염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해수면은 상승해 농경지가 줄고 녹지가 감소되어 서식지를 잃은 동식물은 아열대성 병충해와 신종감염병에 걸려 개체수가 감소합니다.

BQ1. 한반도 기온 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로테이션)

- ①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사용비율을 과감하게 늘리고, 이를 위해 시민
들은 전기료 인상과 같은 에너지 전환 비용을 부담한다.
- ②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걱정되지만,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비용이 크게 부담이 될 것
으로 보여 점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한다.

※ 신재생에너지: 태양, 수력,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나 수소나 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

미래 변화 가능성

- 미래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판단 기준에 의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1) 각종 신체부착 센서를 통해 인공지능이 건강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 경고를 주고(사전예방), 병원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해 치료 및 수술 방법이 제안됨 (사후치료)
 - 예2) 법률 문서, 판례 분석, 증거 분석 등 이른바 리걸테크(legal tech)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이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음 (사례: 美위스콘신주 AI검사 시스템 '컴파스' 도입)
 - 예3) 교통 정보, 도로 상황, 운전자 상태 등 차량 내/외부 데이터의 종합적 수집 및 판단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완전한 자율주행 실현
- 그러나, 인공지능에 의해 내려지는 의사결정의 품질 및 신뢰도에 따라 향후 인공지능 기술 혁신 속도 및 적용 범위 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BQ3.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로테이션)

- ① 빅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인공지능의 오류가능성은 인간에 의한 판단 오류보다는 작으므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확산해야 한다.
- ②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및 판단 오류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묻기 어려워 인간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제한적인 역할로 활용해야 한다.

빅데이터의 활용

미래 변화 가능성

- ◆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을 통한 급진적인 기술, 교육, 문화, 정치, 사회 등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 특히,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가공 등을 위한 빅데이터로의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 예1) 고객의 운전패턴, 생활패턴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
- 예2) 실시간 교통상황, 수신자 상황, 지리적/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최적의 배송 경로 분석으로 기업 경영 프로세스 및 유통 효율성 개선
- 예3) 스마트 기기 및 센서와 연결을 통해 수집된 개인 건강(칼로리, 식습관, 혈압, 수면 패턴 등) 정보의 다양한 분야 활용(헬스케어, 농수산, 금융보험 등)

- ◆ 빅데이터는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반면, 데이터 독점 및 무분별한 데이터의 수집 등으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 뿐 아니라 기업 또는 국가 간 보안 이슈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BQ4.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로테이션)

- ① 빅데이터가 주는 다양한 분야의 활용가치 및 우리 사회에 주는 편익을 고려하면, 비록 악용 가능성이 있더라도 데이터를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다양한 편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더라도, 특정 기업, 단체, 정부로 하여금 관리·통제하도록 하여 악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식량 자원 정책

미래 변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에는 경작지 면적 감소, 농업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우리나라의 불리한 농업환경으로 식량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며, 세계정세와 세계 식량시장의 악화에 따라 무역제한이 이루어질 경우 안정적인 식량확보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이 올 경우 우리나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커다란 변화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BQ7. 향후 우리나라 식량 수급에 위기가 온다는 가정 하에 원활한 식량수급을 위하여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로테이션)

- ① 유전자편집기술을 활용한 GMO작물이 안전성을 검증 받지 않았지만, 생산력·경제성·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GMO작물 재배수입을 허용한다.
- ② GMO작물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배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안 되며, 대신 농업에 대한 대대적 기술투자와 기업화를 통해 생산성을 어느 정도 높이고, 나머지 식량 부족 상황으로 인한 식량가격 상승은 국민 전체가 감수한다.

※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란?

생산성 · 품질 향상에 이로운 유전자를 끼워 넣고 해로운 유전자는 제거하는 등의 유전자 변형을 통해 만든 작물 · 생물을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과 품질, 병충해 저항성 등을 가지고 있어 효율성이 높고 비료 · 농약 등 사용제한으로 직접적 환경피해가 적은 작물을 의미합니다.

반면, GMO 작물이 퍼져나가 생태계를 교란시킬 가능성과, 인체영향에 대한 우려, 더 강한 병충해의 발생 촉진, 유전자 조작에 따르는 윤리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GMO 재배는 사실상 금지되고 있으며 연구목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으나, 이미 해외로부터 GMO작물을 원료로 수입하여 콩 · 식용유 · 면화 · 과자원료(옥수수) 등 공산품의 형태로 상당 부분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교안보정책(한중미일 관계)

미래 변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국제정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일 것입니다. ◆ 경제의 폭발적 성장에 발맞추어 군사력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 중국은 육·해·공의 첨단무기를 기반으로 하는 공격력뿐만 아니라 핵무기 전력에서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성장은 특히 북한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이 상황에서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한-미-일 동맹체제를 이용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BQ8. 미래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특히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견제 강화라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떠한 방향의 정책을 취하여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로테이션)

- ① 경제에서는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외교안보에서는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의 중요성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재자/균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정책

미래 변화 가능성

- ◆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개인의 소득보다는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 또한 지난 경제성장 기간 동안의 부동산 투기로 지나치게 높아진 부동산 가격은 청년계층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저소득층,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미래에는 이러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 ◆ 따라서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의 환수를 통해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공개념*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토지공개념 : 토지는 한정되어 있으며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자원인 만큼 공공의 복리를 위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거나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다는 개념

BQ11.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로테이션)

- ① 토지공개념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토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 전액 환수(양도소득세 강화), 투기용 부동산 소유 제한, 보유세 대폭 강화 등의 정책을 실시한다.
- ② 토지공개념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부동산 투기가 극심하거나 보존이 꼭 필요한 지역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가족 제도

미래 변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으로 가족은 남녀의 애정·신뢰를 기반으로 상호부양의무를 지는 부부 관계를 통해 출생한 생물학적 자녀에 의해서 구성되는 생활공동체로 이해됩니다. ◆ 그런데 미래에는 남녀가 애정·신뢰·부양의 수준이 낮은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부부와 자녀가 애정·신뢰·상호부양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관계나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한 합리적인 목적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편, 동성 커플이 애정·신뢰·부양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이들 커플이 자신들과 유전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아동도 자녀로서 그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할 것입니다.

BQ13. 미래사회에 증가하게 될 새로운 생활공동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방향의 정책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로테이션)

- ① 후속세대의 생산·양육과 상호부양이라는 가족의 본래적·전통적 기능을 고려할 때 혼인·혈연(또는 입양)에 의해서 성립하는 현재의 가족 형태(애정·신뢰·부양의 공동체)만이 가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②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가족과 유사하다면, 혼인·혈연(또는 입양)에 의하지 않은 생활공동체도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

지방 분권

미래 변화 가능성

- ◆ **미래의 한국 사회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다원화·다문화사회가 될 것입니다.**

예1) 고령화와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의 인적 구성이 다양화
→ 사회정책, 복지정책, 조세·재정정책, 경제·산업정책의 탄력적 변화

예2) 블록체인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활성화 →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증가
- ◆ **미래사회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수요와 경제적·사회적 변화의 속도 등을 잘 파악하여 유연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따라서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펴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삶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주체적인 역할과 기능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 **현재는 중앙정부 주도에 의한 통일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 ◆ **미래의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BQ16.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로테이션)

- ① 지방정부 간의 경쟁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주민자치 수준 제고 및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로 점차로 이양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책 수립 및 집행 시, 국가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하고, 지방정부의 정책능력은 중앙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의 수준을 현재보다 높일 필요는 있지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타임]

환경 정책

미래 변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의 기온과 수온이 상승해 심각한 적조현상이 일어난 바다에 수많은 작은 플라스틱 조각과 미세플라스틱*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미세플라스틱의 독성물질이 바다 생태계를 오염시켜 시민들은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 홍수, 폭우 등으로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쓰레기 침출수는 지하수와 하천을 오염시킵니다. <p>※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병이나 쓰레기가 잘게 부서지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p>

BQ2.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로테이션)

- ① 현재의 플라스틱 제품 대량생산대량소비를 유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신기술(재활용, 생분해, 유해물질 저감 신소재 등) 투자를 확대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인다.
- ② 신기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값싼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구매를 어렵게 하고, 개인의 일회용품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 소비를 전반적으로 규제해 적극적인 환경 안전 사회로 전환한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기술

미래 변화 가능성

- 미래에는 아이의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조작하는 생명기술이 확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그 시초로 최근 영국에서는 디자이너 베이비(맞춤 아기) 기술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에서 통과된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디자이너 베이비 기술 대상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돌연변이를 가진 여성들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난자 (핵만 추출)	+	공여 받은 다른 여성의 난자 (핵 제거)	+	아버지의 정자	=	맞춤 아기
--------------------	---	------------------------------	---	---------	---	-------

- 이렇게 탄생한 아이는 엄마 둘, 아빠 하나를 가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이런 선택 중 일부는 여전히 혐오감을 주는 반면 어떤 선택은 신중한 육아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에 대한 당신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될 것입니다.

BQ5. 바이오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대하는 정책에 관해서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로테이션)

- ① 유전자 선택 및 조작 등 생명 기술은 수명연장, 증강인간의 실현 등 인간의 삶을 향상시킬 것이므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 ② 유전자 선택 및 조작 등 생명 기술의 과도한 활용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우주 개발

미래 변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위성 기술의 국제협력과 우주발사체 기술의 발전으로 우주탐사 여건이 좋아져 2050년 인류는 화성, 소행성, 금성, 수성 등 근접 행성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 우주에는 스마트폰, 자동차, 의학, 광학 등에서 사용하는 희토류 금속이 풍부합니다. ◆ 희토류 금속은 지구 매장량이 많지 않아 전세계적으로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우주개발 기술수준이 앞선 선진국들이 달이나 소행성에 묻혀있는 우주 희토류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앞선 기술로 우주진출에 성공한 소수의 선진국 국민들은 높은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BQ6. 우주개발의 관점에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로테이션)

- ① 우주개발에는 대규모 자금 투자와 실패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우주산업분야의 규제를 없애거나 지금의 과학기술투자 수준을 유지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 ② 정부는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우주 기초과학기술 연구개발비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복지 및 노동 정책

미래 변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성장시대의 도래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는 우리 경제의 작동원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공지능(AI)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 가계소득 정체가 대표적 사례이며 이로 인해 전통적 고용방식의 해체, 중산층의 붕괴에 대한 우려와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양상은 현재도 어느 정도 진행 중이며, 미래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리라는 데 일반 대중과 전문가 집단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가계소득 감소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에는 특정 방향으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BQ9. 소득양극화가 심각하게 됨에 따라서 중산층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복지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설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로테이션)

- ①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과 같은 보호 대상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복지 정책을 실시하여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
- ② 재정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기본소득과 같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시하여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복지 및 노동 정책

미래 변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성장시대의 도래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는 우리 경제의 작동원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공지능(AI)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 가계소득 정체가 대표적 사례이며 이로 인해 전통적 고용방식의 해체, 중산층의 붕괴에 대한 우려와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양상은 현재도 어느 정도 진행 중이며, 미래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리라는 데 일반 대중과 전문가 집단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가계소득 감소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에는 특정 방향으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BQ10. 인공지능에 의해서 저숙련 노동뿐만 아니라 숙련노동 및 정신노동도 대폭적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노동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로테이션)

- ①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의 노동이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의 발달은 새로운 일자리를 낳을 것이고, 노동에서 자유로워진 인간은 더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의 인간 노동 대체에 대한 통제 정책을 취할 필요가 없다.
- ②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인공지능은 인간 노동을 매우 빠르게 그리고 대규모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와 범위를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조절·통제하는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인프라 정책

미래 변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추계상 2030년부터 우리나라의 절대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감소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절대적인 인구감소와 함께 인구의 고령화도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도시보다 지방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인구가 매우 적은 지역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병원 등과 같은 생활기반시설 이용이 급격히 감소할 것입니다. ◆ 이러한 지역에서 앞으로 생활인프라 수준을 어떻게 할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BQ12.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생활기반시설 수준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로테이션)

- ① 인구가 매우 적은 지역에 생활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용이 매우 적으며, 향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생활기반시설을 축소한다.
- ② 인구가 매우 적은 지역이라도 정주여건의 질을 유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정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생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확충한다.

이민 정책

미래 변화 가능성

- ◆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 뒤에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의해 노동력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 물론 현재에도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 ◆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게 되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노동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 ◆ 이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는 노동이민의 증가로 인하여 인종적·문화적·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민정책의 적극적 수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 BQ14.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로테이션)**
- ① 이민정책의 적극적 수용에 따른 외국인 증가는 한국 사회에 인종, 문화, 종교 갈등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이민은 가능한 억제하는 것이 좋다.
 - ② 정년을 연장하고 출산률을 높이거나 기술발전 등을 통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민 정책을 확대하면서 외국인의 문화적·사회적 통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정치 갈등

미래 변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사회에서 기존의 갈등은 이념, 경제적 지위를 축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갈등은 곧 정치적 갈등으로 표출됩니다. ◆ 하지만 미래 한국 사회에는 새로운 종류의 갈등이 중요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성애 문제, 낙태문제, 외국인 노동자 및 난민 문제, 세대간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 이러한 문제로 인한 갈등은 현재에도 존재하지만, 그 갈등의 수준이 미래의 한국에서는 선진국이 겪는 수준으로 심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갈등은 정치적 갈등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고, 기존에 존재하던 갈등과 결합하여 한국 정치의 갈등 수준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BQ15. 미래 한국의 새로운 정치갈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언어·인종·종교·성정체성·젠더 등에 관해서 정부가 어떠한 방향에서 사회·문화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로테이션)**
- ①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한하기 위하여 사회적·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 ② 사회적·문화적 갈등이 다소 증폭될 위험이 있더라도 사회적 다원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긍정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안락사

미래 변화 가능성

- ◆ **의학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임종 직전의 중환자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연명 치료로 생명이 근근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은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견디기 힘든 고통일 수 있습니다.**
- ◆ **환자가 이러한 고통을 계속 겪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택하였을 때 의사가 그 죽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존엄사” 제도라고 합니다.**
- ◆ **이를 흔히 “안락사”라고도 하지만, 안락사는 존엄사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 ※ “안락사”는 말기 임종환자와 달리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 의사의 도움을 얻어서 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 ◆ **현재 우리나라에서 존엄사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에서 허용되고 있지만, 안락사는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미래에는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넘어 150세를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단, 수명이 연장된다고 하여 그 기간 동안 삶의 질도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치매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만성질환과 노화가 완전히 정복된 것이 아닌 이상 병마와 신체기능의 쇠퇴에 따른 고통을 수명이 연장된 만큼 더 겪어야 할 수 있습니다.**

BQ17.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훌쩍 넘어서 15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도래 한다고 했을 때, 사망에 임박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서 의사의 도움을 얻어서 자신의 생명을 편안하게 마칠 수 있는 안락사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방향의 정책을 취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로테이션)

- ① 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귀한 것이기에 말기임종환자에 대한 존엄사와 같이 매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락사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고령이나 만성질환 등에 따른 고통으로 인간다운 삶이 어려울 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에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여쭙겠습니다.

DQ1. 귀하께서 현재 하고 계신 일(직업)은 무엇입니까?

- (1) 전문직 (2) 경영/관리직 (3) 사무직 (4) 전문기술직
- (5) 판매/서비스직 (6) 단순노무/생산/단순기술직 (7) 자영업자 (8) 가정주부
- (9) 학생 (10) 무직 (11) 기타

DQ2. 귀하의 가구 전체의(세전) 월 평균 소득은 대략 얼마입니까?

- (1) 200만원 미만 (2)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3)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4)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 (5)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6) 1,000만원 이상

DQ3.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1) 국졸 또는 중학교 졸업(재학중 포함) (2) 고등학교 졸업 (재학중, 중퇴 포함)
- (3) 대학(교) 졸업(재학중 포함) (4) 대학원 졸업 (재학중 포함)

DQ4. 실례지만 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 (1) 기혼 (2) 미혼 (3) 기타(이혼, 사별 등)

DQ5. 그럼 자녀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 연령대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1) 자녀 없음 (2) 미취학 (3) 초/중/고 재학 중
- (4) 20대 이상 성인

DQ6.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 (1) 매우 진보 (2) 다소 진보 (3) 중도 (4) 다소 보수 (5) 매우 보수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책 임 연 구 진 |

김유빈 연구위원

민보경 부연구위원

박성원 부연구위원

정영훈 연구위원

송지은 연구원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국민의 파트너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6-2190 www.nafi.re.kr